

우리 언론의 일그러진 초상화

편집인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정보자료실 CPh1.7

98 모니터

B 13-78

인권정보자료실		실
CPh1.7		
B13	78	

우리 언론의

일그러진 초상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언론교육의 전통, 참언론실천의 한마당”

■ 언 · 론 · 학 · 교 ■

강좌	강의주제	강사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임재경(본회 언론아카데미 교장, 언론인)
[1강] 언론과 정치		이효성(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본회 정책위원장)
[2강] 신문 바로읽기		손석춘(한겨레신문 문화부 차장)
[3강] 방송 바로보기		최영목(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4강] 미디어운동의 현황과 전망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5강] [특강] 한국영화의 현실과 전망		문성근(영화배우)
[6강] TV시사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정길화(프로듀서연합회 회장, MBC PD)
[7강] 한국언론의 역사		김동민(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수련회] 1박2일 MT		[민언련 간사들과 함께하는 1박2일]
[8강] 영화 百年史와 비판적 전망		정성일(월간 'KINO' 편집장, 영화평론가)
[9강] 글로벌시장 글로벌매체		김승수(전북대 신방과 교수)
[10강] 광고 읽기		신태섭(성균관대 신방과 강사)
[11강]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스		한창완(세종대 영상연구원 교수)
[12강] 언론피해와 그 대책		박형상(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13강] 지역언론과 민주주의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14강] 대중가요의 재미와 보수적 욕망		이영미(한국종합예술대학 예술연구원, 문화평론가)
[15강] 언론개혁의 과제와 전망		최문순(언론노련 위 원장, MBC 기자)
[16강] 방송현장에서 보는 언론운동		정미정(KBS아나운서)
[17강]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과제		최민희(본회 교육홍보국장)
[졸업식] 개근상, 수료증 수여		성유보(본회 이사장)

★ 일정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 : 2개월 과정, 매주 화·목 오후 7시~9시
- 정원 : 70명
- 장소 : 민언련 교육관(마포 불교방송국 7층)
- 대상 : '언론'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수강료 : 10만원 (월간 말 정기구독자 8만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89-13-03924-2 민언련

우리 언론의

일그러진 초상화



신문 모니터

목 차

I. 언론모니터로 본 '98

1. IMF 시대의 언론

재벌개혁에 소극적인 언론, 언론과 노사정합의
눈가린 총파업 비판, 부정적인 노동절 보도, 언론의 빅딜 죽이기

2. 대북 보도

북풍조작사건 보도, 북풍공작과 권영해
북한 잠수정사건, 북한 위성 관련 보도, 총격요청설 보도

3. 또다른 이야기들

JP총리 인준, 3·13 사면, 4·2 재보궐선거, 월드컵축구, 피노체트 보도

II. 6·4 지자체선거보도 모니터

1~7차 지방자치단체 선감연 모니터 보고서

III. 조선일보를 진단한다

1. 이승복군 관련 모니터
2. 최장집 교수 관련 모니터1
3. 최장집 교수 관련 모니터2
4. '말'지 기고 조선일보 기획모니터

방송 모니터

목 차

I. 6·4지자체 선감연 모니터 보고서

1~5차 지방자치단체 선거보도 모니터

II. 일상모니터

1. 시사·토론 프로그램 모니터

신창원 관련 보도

박세리 관련 보도

MBC PD수첩 = 오보 그 진실을 밝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국군 포로 장무환

iTV 터놓고 말합시다. - 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사태

2. 오락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오락프로그램

주부대상 토크 프로그램

일일 드라마

III. 이달의 좋은방송, 나쁜방송

1. 9월의 좋은 방송 <KBS 2TV '정범구의 세상읽기'>
2. 11월의 좋은 방송 <KBS 2TV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3. 12월의 좋은 방송 <EBS '시네마천국'>
4. 12월의 나쁜 방송 <SBS '한밤의 TV연예'>

<부록> 신문·방송분과 소개

1998년을 돌아보며...

98년도 신문, 방송 모니터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본 모니터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권력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언론은 IMF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리하고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축소시키는 주장을 펼친 반면에,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초점을 흐리는 논조로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아왔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해서도 언론은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구조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단순한 모금운동 등 일회성 캠페인만을 벌이며 빈부격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켜 왔습니다. 즉, 언론권력은 IMF 사태를 이용하여 지배세력의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기업경영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모니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자 총파업에 대하여 언론이 어떻게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부에 대해서도 연합정부로서의 취약한 고리와 정책 실패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도를 적절하게 억제하는 한편, 적당한 견제와 타협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정책과 환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견제와 비판이 아니라 정치혐오와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견제의 수준을 넘어선 권력 투쟁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언론의 정부 비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보수세력의 이익 옹호를 위한 여론조성을 위한 정책 비판과 견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곡설, 국민 실정을 무시한, 아니 무시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않는 언론의 모습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팀이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계급이기주의에 토대를 둔 권력투쟁을 '공정보도', '정론'(正論)이라고 포장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정책을 왜곡시키는 언론사들에 대항하여 진실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8년도는 언론모니터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했었으며, 그만큼 치열하게 활동을 전개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과의 치렀던 치열한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며, 올해에도 감시와 비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신문 방송 모니터 활동이 벌써 7년이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언론보도 감시 활동도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며, 주위의 기대와 바람 또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더 냉철하고 과학적이며 목표를 분명히 정한 모니터 활동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보고서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우리의 모니터 활동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평가와 반성 속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뜨거운 정열과 열의로 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문, 방송모니터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9. 3. 26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유보

“민언련에서 배워야 제대로 배웁니다”

■ 대/학/연/론/강/좌 (여름, 겨울) ■

일시	강의 주제	강사
월 [입학식] 1:00 입학식	임재경(본회 언론아카데미 교장,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1강] 2:00 신문제작구조의 이해	손석춘(한겨레신문 문화부 차장)	
화 [2강] 1:00 기획과 현장취재	정지환(월간 말 기자)	
[3강] 3:00 기사작성실습(1)	최민희(본회 교육홍보국장, 전 월간 말 기자)	
	<스트레이트 기사작성①>	
수 [4강] 1:00 기사작성실습(2)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인터뷰기사 바로쓰기①>	
[5강] 3:00 우리 말·글 바로쓰기	김효곤(교사, 전 우리교육 기자)	
목 [6강] 1:00 언론사 진출기	이진호(MBC 보도국 기자)	
[7강] 3:00 기사작성실습(3)	최민희	
	<스트레이트 기사작성②>	
금 [8강] 1:00 기사작성실습(4)	정광섭	
	<인터뷰기사 바로쓰기②>	
[9강] 3:00 기사작성실습(5)	최민희	
	<스트레이트 기사작성③>	
[졸업식] 5:00		

* 일정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 여름·겨울방학 기간중 1주일, 월~금 오후 1시~5시
- 장소 : 민언련 교육관 (마포 불교방송국 7층)
- 대상 : 대학언론일꾼 및 기사쓰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 수강료 : 7만원 (월간 말 정기구독자 5만원)
- 인원 : 70명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89-13-03924-2 (민언련)



신문 유감

권력을 좇다가 좇다가 그 자신이 권력이 되어버린 몇몇 신문들. 그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그런데서인가, 대충전 신문의 날인 보기도문 글들이 이들 신문의 지면을 장악해놓았다.



사람들이 건정 보고싶은건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는지.

I

신문모니터로 본 '98

1. IMF시대의 언론



언론의 재벌 편들기

IMF체제 속에서 맞이한 98년 새해 언론의 첫 화두는 단연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였다. 언론들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고통분담을 내세워 재벌과 노동자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책추진과정에선 기득권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리해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재벌개혁 부분에선 목소리를 낮추는가 하면 실업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총파업, 노동절 집회에 대해 대외신인도를 앞세워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했다. 반면 '빅딜'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재벌 구조조정에 대해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 재벌을 옹호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재벌개혁에 소극적인 언론>

정리해고는 적극 지지 재벌개혁은 나 몰라라

98년1월7일~15일

조선, 동아, 중앙, 한국, 한겨레, 경향, 문화
신문모니터분과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대부분의 언론이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적극 지지하는 반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중앙, 문화, 경향 등 재벌언론들은 '재벌이 수출과 근대화의 역군이었음을 잊지 말라', '성급한 개혁은 경제위기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등 재벌 공치사에 바쁜 모습이었다.

재벌언론, '가제는 게 편'?

중앙일보는 9일자 3면 사설에서 "재벌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 이라고 하여 재벌을 옹호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역시 6일자 사설을 통해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59%" 라는 등 대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향은 7일자 사설에서 재벌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금지가 "다분히

정치적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1년 내 전면 금지 뎀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으로 재벌개혁의 유예조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재벌언론의 보도태도는 결국 구제금융시대를 불러온 외환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중앙일보에서 이러한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 8일자 사설 <드러나는 외환위기의 경위>는 "정부가 위기를 감지하고도 그것을 숨기거나 의미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며 정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14일자 사설 <시동 걸린 기업 개혁>에서도 "대기업 정책의 방향은 경쟁축진을 통해...대기업 그들에 대한 경영감시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야 한다" 고 주장했는데, 이는 재벌개혁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문화일보는 노·사·정 위원회 출범에 즈

음하여 14일자 사설 <노사정 합의 출발점 되도록>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재원화 추진은 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을 기업경영에 투자하도록 촉구한 김대중 당선자의 발언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IMF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언론이 IMF의 재벌개혁요구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내세워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신문재벌들은 사설을 통해 대체적으로 차기정부에서 추진중인 재벌개혁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 <고통은 노·사가 함께라야>에서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장본인은 은행 돈 끌어다가 정치인 관료에게 물 쓰듯 뇌물을 뿌리고 선단식 차입경영을 해온 재벌들”이라고 하여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13일자 <재벌과 책임경영>에서 “검토가 아닌 실행차원에서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며 진일보한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8일자 칼럼에서 ‘수출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과격한 개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포를 놓았고 10일자 김대중 칼럼은 <또 제 몫 챙기는 노·사>라는 양비론으로 개혁의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책임소재를 노사 양측에 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에 대한 책임추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한겨레는 7일자 사설에서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형식에 대한 손질이 없는 한 재벌폐해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정리해고 도입은 적극 지지

한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경제위기

극복에 불가피한 조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론재벌과 재벌언론은 시각 차를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11일자 <정리해고 다룰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1,2월 국회로 나눌 것 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일괄 입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파동이 불가피하다면 단번에 처리해 사회적 부담을 단기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정리해고제 입법화의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민주주의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화일보는 7일자 사설 <노·사·정 협의체 잘 이끌라>에서 “정리해고 조기 시행문제는 IMF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 시행치 않을 수 없는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11일자 사설 <정리해고 다룰 시간 없다>에서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은 IMF와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절대절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 재벌신문들은 IMF에서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 재벌의 이해관계만 좇는 이중적인 보도태도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중앙일보 15일자 특파원 칼럼은 네덜란드가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결의한 바세나르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고용확보정책이 병행됨으로써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칼럼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을 갖게 했다.

반면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고통은 노사가 함

께라야>은 “과거 불황이 닥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난국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자기자본의 몇 배 또는 몇 십 배의 부채를 안고 있고 그 부채규모가 연간 매출액을 웃도는 기업들이 태반인 현실에서 인건비 부담을 얼마간 줄인다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여 경제위기에서 재벌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역시 13일자 사설 <재벌과 책임경영>을 통해 “현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재벌기업에 있다. 재벌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국가경제의 부실화와 외환위기를 불러들였고 그 고통을 국민과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고 하여 조성과 마찬가지로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돋보이는 사설이 있다. 동아일보 7일자 <여성 우선 해고 안될 말>이나 친환

경적인 기업으로 구조 조정할 것을 역설한 경향신문 10일자 <IMF시대의 환경문제> 한국일보 7일자 <실업대책이 급하다>와 한겨레 7일자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왜 서두르나> 9일자 <IMF범죄와 치안>등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일깨워준 좋은 사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노동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대량실업으로 초래될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은 찾기 힘들고 노-노 갈등과 노동자들의 폐쇄성만 보도됐다. 또한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노·사·정 위원회를 정리해고 관철을 위한 도구로 치부하고 있어 갈등조정이라는 노·사·정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묻혀버렸다는 분석이다.



요리책 대로만?

<언론과 노사정 합의>

노동자 희생 모른 척 전교조 두드리기에만 열성...기득권 입장 대변 뚜렷

1998년 2월 3일~12일

조선, 동아, 경향, 한국
신문모니터분과

1

-노동자 희생 외면하는 조선일보-

98년 2월 4일~10
조선일보 모니터팀

노사정 합의내용에 대해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이전에 달리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식의 대응논리를 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낮추는 등 편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사정 합의정신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

2월 7일자 1면과 3면에는 각각 <[정리해고]이 달 시행><노조 정치활동 허용>, <고통 '3등분'>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사정 3자는 6일 서로간의 주고받기를 통해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대 타협을 이뤄냈다" 라고 쓰고 있어 마치 노측과 사측이 공정한 거래를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노사정합의안이 대체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고 있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도는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재벌들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날 <노사정 타협이후>라는 사설에서는 "노동계가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것은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며 고통분담의 술선수범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처럼 '정리해고제 수용'을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라고 극찬하는 등의 논조와 같은

날 3면의 "가장 직접적인 고통분담의 당사자는 노동계이다" 라는 기사는 결국 노동자 달래기로 가장하여 정리해고제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자 기자수첩 <대타협의 그늘>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사정 합의는 국제 신인도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요구 앞에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일터를 내놓은 것이다. 그 타결 안을 보아도 전부를 주고 일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나라 살리기와 고통분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실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아울러 정, 재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합의 도출과정에서도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적합한지를 따져 구성원간의 고통 분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황전달에 치중했고 내용적인 비교보다 수량적인 측면에 치우쳐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합법화에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

더욱 큰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에 투철하지 못한 채 노동계의 요구대로 전교조의 단계적 허용 등 정치적 양보와 타협을 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 라고 언급한 것은 대타협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단 것만 삼키려는 기득권 층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기득권 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신문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6일자 <전교조가 흥정대상인가>라는 사설에서는 "교육현장을...노동현장과 똑

같은 잣대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교육이 정치 사회적으로 특정한 경향성을 보였던 것도 사실" 이라는 등 교원노조에 대해서만은 국제 관행을 무시한 채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강요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국제 기준과 요구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면서 교원노조나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그 관행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7일자 23면 <"교단 정치바람 걱정" 교총 등>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굵게 위에 배치 한 반면, <전교조선 "아래로 부터의 개혁 계기" 환영> 기사는 가늘게 아래에 배치하였다. 같은 날 21면 <전교조 합법화 교육계 전망>에서도 전교조의 기자회견 사진이 실렸지만 기사내용에서는 전교조 측 입장설명은 전혀 없고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주로 싣고 있어 객관보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교원이나 학부모등 주체들의 반응이나 전교조 측의 의견 보도에는 인색하고 교육관료들의 결사반대만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권을 받아온 지 오래이다. 더욱이 교사들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10일자 사회면의 <전교

조 합법화 갈등>, <"이념투쟁 격화" "기본권 찾았다" 맞서>처럼 대립만을 보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발전 방향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제시가 아쉽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각 주체가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타협안이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되며, 지속적인 개혁이 따랐을 때만이 노동자들의 희생이 의미를 지니고 사회적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다. 언론의

"순수한 경제 논리에 투철하지 못한 채 노동계의 요구대로 전교조의 단계적 허용 등 정치적 양보와 타협을 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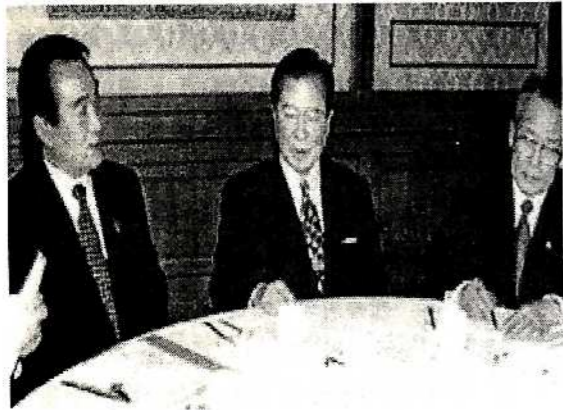
- 재벌 논리에 충실한 동아일보 -

98년 2월 4일~10
동아일보 모니터팀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동아일보는 정부나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먼저 4일자 5면에 실린 <재벌개혁-고용조정 '양날의 칼', 노사 적절히 압박 땀 실현가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대기업도...5개원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용조정문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받아들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라고 쓰고 있어 '수용하는 재계'와 '반대하는 노동계'를 대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노조의 입장이 마치 경제위기 해결의 걸림돌인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보도로 비판받았다.

5일자 3면의 <노사정 오늘 시한 막바지 절충>이



라는 기사에서는 마치 노사정위원회가 고용조정 타결을 위해 구성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7면에 실린 <비대위안-노사정위 합의안 조율 관심>이라는 기사에서는 비대위의 안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대위안이 재벌개혁의 핵심사안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여서..."라고 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위한 토대가 형성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편 6일자 1면 <노사정 쟁점 심야 절충>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해고의 요건에 기업의 인수 합병을 포함해야만 국제통화기금과 외국자본의 요구에 부응한다며..." 기업의 인수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IMF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같은 날 16면의 「발언대」에 실린 <노동계 정리해고 방안 스스로 찾아야>라는 기고문에서도 "정부나 기업에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노동계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고 하여 정부와 기업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정리해고를 노동계 스스로 찾아야 할 해결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태도로 지적 받았다. 이 기사는 또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남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을 각출해 가칭 '국제통화기금상조회기금'을 조성, 해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이것이 노동계가 정부나 기업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정리해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려울수록 쌀 한 톨도 이웃과 나누는 우리의 미풍 양속을..." 이라는 내용을 통해 미풍양속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고통을 나누어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하자는 주장을 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일자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관련 기사에서는 다른 사안보다도 고용조정 타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와 노조정치활동, 노조전임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총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5면 <목소리는 커지되 청년보장혜택 사라질 듯>이라는 기사에서는 "교원노조 허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원들의 지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며 청년시기나 고용제도의 변화가 마치 교원노조 허용의 결과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노조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5면 <노동자 권익 향상...조합원 복리 밀려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지만 정치활동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조합비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조합비의 정치자금 사용은 선진국에서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쓰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비의 정치자금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기사화 하였는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10일자 <힘들어도 '개혁속제' 해내겠다>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재계는 상호지보 해소시한의 탄력적인 적용과 순수지주회사설립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개혁안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라든지 "임원들은 결합재무제표...상호지보해소...주총전에 비서실 해체는 어렵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임원들은...신기술 첨단업종 투자에 대한 상호지보분에 대해선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등 재계의 구조조정의 한탄만을 싣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재벌이 개혁에 힘쓰겠다는 의미의 제목과 기사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 전형적인 제목 달기의 왜곡으로 비판받았다.

이상, 동아일보의 노사정위 대타협에 관해 고용조

정문제의 타결 그 자체만을 환영하고 있을 뿐 노동자들이 얻어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보도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재벌개혁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의 어려움을 부각하는데 급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공정 보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불공정 보도는 재벌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경제위기의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3

- 현실왜곡·은폐하는 한국일보 -

98년 2월 4일~10
한국일보 모니터팀

한국일보는 노사정 타협이후 노조 측의 입장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 반면 정부나 재벌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나 전교조 합법화와 같이 노조 측이 얻어낸 성과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정리해고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2월7일자 사설 <대타협을 대합의로>에서 한국일보는 정리해고의 도입에 대해 “전 산업에 걸쳐 이미 산업 현장에서 여러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기업주의 부당해고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9일자 사설 <교원노조 파문>에서는 “노조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일하는 만큼 노조 스스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야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노조 측의 요구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 철저히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일보는 7일자 1면과 2면에 각각 <재벌개혁 호지부지 않을 것>, <이젠 대기업 고삐 쥘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어 미흡한 재벌개혁이 마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결국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9일자 1면과 경제면에 머리기사로 각각 <재벌체제 존속 못한다>, <총수 '황제식경영' 막 내린다>등의 제목을 달고 있어 좀처럼 실천되지 않는 재벌개혁이 진행되거나 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반면 재벌개혁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기사도 있었다. 2월 9일자에는 <총수 '황제식경영' 막내린다>라는 제하의 기사 밑에 <회장실, 기조실 해체> 재계 반응 당황.. 곤혹.. 불만.. “합의는 했지만 현실 무시한 요구”>라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부각되지 않은 채 재벌개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의 기사와 대조적이었다.

7일자 5면의 <평생직장 옛말 근로자 지위 위축>이라는 해설기사는 향후 노동자들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을뿐더러 단지 ‘위축된다’는 피상

적 내용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작은 제목을 <대립, 갈등 청산 참여, 협력의 새모델 기대>이라고 달았으며, 기사 내용에서도 “정리해고제 등의 법제화는 당장 산업현장에 새로운 고용관행을 등장시켜 권위주의적 노사관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분석하는 등 정리해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큰 제목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지위 위축’이라는 표현은 단지 ‘동정’에 그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상 살펴본 대로 한국일보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노사정 합의안인 노조의 정치활동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마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이와 반대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 김윤정)

4

-재벌논리 여전히 '우리사주언론' 경향-

98년2월4일~10

경향신문 모니터팀

경향은 지난 3일 社告를 통해 한화그룹의 '분리독립' 발표 이후 사원들이 소유, 경영의 주체가 되는 '우리사주 언론'으로 거듭 태어났음을 알렸다. 지금까지 소위 '재벌신문'으로 비판받아왔던 경향신문의 이러한 변화는 참언론의 등장을 염원하던 이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지 노사정 대타협을 전후로 한 보도 태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빅딜

과 관련한 재벌개혁 보도 등에서는 여전히 재벌논리를 고수, 경향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6일자 사회면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업들의 부당해고를 비판한 기사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멋대로치고...자르고...깎고-입만 열면 'IMF' 근로자 죽이기 해도 너무한다>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최근 경제난에 편승한 일부 기업들의 마구잡이 해고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보도한 7일자 3면에서는 전단에 걸쳐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측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싣기도 했다. <저기 '실업태풍'이 오고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제를 악용,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노조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그 악용가능성을 다루었다. 또한 <정리해고 '단칼' 막는 제도 미흡>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정리해고제 무차별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에 대한 일방적인 노사정합의측구와 '빅딜'로 표방되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여전히 재벌측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자 사설 <고통분담 정신 깨지말라>에서는 '고통분담'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대 노총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노사정 실무협의 진행상황과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볼 때 이제는 양대 노총이 결단을 내려야 할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국민적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대 노총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날 노사정합의 설득을 위한 박태준 총재의 한국노총 방문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큰 제목은 <박태준 총재 '입춘 전령사'로>로 달았으며,

부제로 <TJ비장한 설득-“내 이름 석자 걸고 재벌개혁 꼭 관철/합의계속 거 부뎀 나라가 파멸한다>로 달아 비장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반면 노총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 '볼멘소리'-“미리 틀 짜 놓고서 밀어붙이면 곤란 특단조치 없는 한 들러리는 안 설 것”>이라는 마치 노조가 엄살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앞의 기사와 대조적이었다.

한편 김당선자와 30대그룹회장 회동을 전후로 대두된 '빅딜'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벌논리를 펼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3일자에서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빅딜'의 이상과 현실>제하의 [정동칼럼]에서 업종전문화와 과잉설비투자론을 비판하고 “인위적 정부개입이 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여론의 지지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서둘러서는 안되”며 “제도 개선 작업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칼럼은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와 이에 따른 과다차입의 병폐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기업자율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견해는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9일자에서 경향은 2면과 경제면에 각각 <재계 회장실 등 폐지반발>, <거스를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숙제'-“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 요구” 못 마땅>라며 차기정부측의 대그룹 회장실 및 기조실 폐지 요구에 대한 그룹 측의 반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차기정부측 요구의 정당성이나 재벌측 입장에 대한 비판 없이 그들의 일방적 반발만을 신는 것은 경향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여전히 재벌의 시각에서 현안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눈가린 총파업 비판>

총파업의 본질은 애써 외면...혼란 부추기기에 급급

98년 2월11일~17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문 모니터분과

지난 9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결의가 있는 이후 각 신문들은 노사정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각 신문들이 민주노총이 노사정합의를 거부했다는 현상자체에만 매달릴 뿐 그 경위에 대한 본질파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부도덕성 부각 치중, 본질 놓쳐

더욱이 각 신문이 과연 노사정합의의 '수호자'를 자임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언론은 노사정 타결 안에서 '전교조 허용', '노조 정치활동 보장' 등의 내용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된 '노동자측의 반발'에는 그토록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지금의 경제파탄을 초래한 주범인 정부와 재벌 측의 미온적 개혁 태도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더지기 때문이다.

각 신문들은 사실에서도 민주노총 측의 '약속과기'에만 초점을 맞춰 그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일단 합의된 내용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그러나 노측이 노사정합의를 깨면서까지 총파업을 결의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그 결과만을 놓고 부도덕성을 거론하는 것은 노측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라는 지적이다.

다만 한겨레신문만이 민주노총의 파업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 11일자 사설 <민주노총 현명하게 판단해야>를 통해 민주노총 측의 대응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법제화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이 우려를 단적으로 반영" 하고 있으며 "재벌개혁의 불철저한 진행이나 노동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의 미흡 등이 반발요인으로 작용" 한 결과라고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어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에서 이처럼 노동계의 입장이나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적인 예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도입에 대한 현 노동자들의 반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대우조선 고 최대림씨의 분신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노사정합의 거부의 본질 파악은 애써 외면한 채 그 수단에 불과한 총파업 차단에만 급급, '제2의 환란', '3월대란설' 등을 제기해가며 총파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만을 부각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민주노총 측에게 모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12일자에서 1면 머리에 <"외국인 배척감정-경직된 노동시장이 두려워요">라는 제하에 국내외국인투자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어 민주노총의 파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그 편집의도를 짐작케 한다. 중앙일보 역시 12일자에서 1면 머리에 <"파업하면 제2환란">, 3면 관련기사에 <"파업이 달려 쫓는다" 경고>라는 제하에 각각 IMF측의 '경고'를 실음으로써 파업이 가져올 혼란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총파업이 철회된 후인 14일자 <'3월위기설'의 결과 속>이라는 제하의 사실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가 취소됐는데도 제2의 외환대란이라는 3월위기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극히 걱정스럽다"며 그 이유를 기업의 비공개 외채, 원자재구입난 등 파업 외의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마치 환란을 부추기는 근본이유가 총파업 자체에만 있는 양 부각시킨 언론의 보도태도는 현 경제 상황을 왜곡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언론은 노사정합의의 '수호자'? '파괴자'?

한편 노사정합의 원안과 달리 일부내용이 노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수정 통과되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 인정문제 등 노측에 유리한 사항은 본회의 상정조차 보류되는 등 정부측의 합의불이행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향은 이미 11일자 사설 <대타협 파기 될 말인가>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제화 과정에 투쟁력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 역시 13일자 사설 <'제2환란' 책임지려는가>에서 "민주노총은 오히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혹시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이 신문들의 보도조차도 임시국회의 파행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채 여야간 대결구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입법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묵살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신문들의 주장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노사정합의 사항 중 또다른 한 축인 대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뿐 제대로 된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빅딜', '대그룹 회장실 및 기조실 폐지'등 차기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추진에 대한 재벌 측의 반발과 어려운 입장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입장에 선 편파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노동계에는 일방적으로 '노사정합의'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재벌의 교묘한 합의안 파괴는 철저히 외면하는 신문들의 보도태도는 '노사정합의의 수호자'와는 거리가 먼 '파괴자'에 가까운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철회했을 때 신문들은 하나같이 "이젠 정부와 재계 차례"라며 크게 고무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

나 신문들이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이 역시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합의거부에서 보여줬던 그 매서운 잣대로 정부와 재계의 합의준수를 엄격히 감시하길 촉구한다.

1

-재벌입장 옹호에 급급한 동아일보-

98년 2월11일~17

동아일보 모니터팀

지난 일주일간 민주노총 총파업과 재벌들의 구조조정 관련보도에서 동아일보는 여전히 재벌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급급하여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자 데스크 칼럼의 <입다문 전경련>이라는 칼럼을 보면 "최종현 회장은 '업종전문화 시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한 마디 했다가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언제까지 기업인이 죄인가. 정부가 재벌의 전횡과 독단을 막는 게임의 룰을 분명히 하고 등거리에서 기업정책을 편다면 기업인도 이젠 할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여 정부의 재벌에 대한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주도의 강력한 재벌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조를 펴는 것은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12일자 1면 기사에서 두드러졌다. <외국인 배척감정-경직된 노동시장이 두려워요>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외국인 투자자들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 내용에서, '한국 경제극복을 위한 과제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노동시장 유연성-23%, 재벌개혁-23%, 부실금융사 정리-18%, 투자환경 개선-16%, 정부조직개편-11% ...』 등 재벌과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마치 경제회생을 위한 과제인 것처럼 제목을 달고 있어 편집상의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25면에 <빅딜 통한 개혁 인기 있으나 법치주의-자유경제 흔들수도>라는 제목의 경총토론회 관련 기사는 "총수의 사재헌납이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추진을 통한 재벌개혁은 국민 정서에 영합할지는 모르나 법치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남덕우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재벌개혁의 부당성을 주요 논점으로 펴고, 또한 "멕시코정부는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 인기가 없지만 절대 필요한 정책들을 채택했다. 결국 멕시코 국민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의 덕택으로 이제 차츰 경제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멕시코 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경제회생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조를 펴으로써 재벌의 논리 기득권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멕시코는 물론 경제를 희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오늘날에도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3일 <기업결합 기준강화... '빅딜' 어려워져>라는 기사는 "빅딜은 차기정부가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제도적 장치 없이 기업에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한 끝에 재계 자율로 맡겨졌으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기사를 통해 빅딜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거대기업의 탄생은 철저히 막을 것...", "...빅딜은 대표적인 경쟁제한 기업결합행위로 인정돼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국제기구의 압력 때문"이라는 기사는 공정위와 국제기구의 목소리를 빌려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핵심과제인 빅딜의 어려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6일 <'정리해고' 곧 발효 대규모 감원 예고>라는 제목기사는 이후 6면에서 <화이트칼라 주 대상>이라는 연속기사에서 "그 동안 국내기업들은 인력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적자사업을 매각하거나 조직통합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재계는 차기 정권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나름대로 한계사업 철수 및 관련 인력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협력업체 및 임직원의 반발을 우려, 정리해고법 통과 때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었다"는 기사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치 고용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논조를 펴므로써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총 관계자는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와 실업대책기금 증액 등은 당초 합의안보다 훨씬 내용이 좋아졌다"는 계속된 기사에서 14일 처리된 노사정위 처리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였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처리법안 중 실업자에 대한 노조조합원 인정 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입장은 밝혀주지 않고 단지 한국노총의 의견이 마치 노동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논조를 펴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5면의 <실업급여 재원 1조6천억원 늘여>라는 기사는 소액주주권한 강화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약화되는 비대위안이 채

택된 것에 대해 "그러나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기사화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화된 민주주의 입장을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노동계의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아 당장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직자가 노조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무조건 불만을 터뜨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듯 한 논조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실직자의 노조조합원 금지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입장을 다루기 보다는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25면의 <모양은 갖췄지만 내용은 고만 고만>이라는 기사는 제목선정은 뛰어나지만 "...상호지급보증의 완전해소나 기초실폐지 등은 재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그를 주력사를 인수한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를 허용을 요청하면 우리 기업들은 줄줄이 외국기업에 넘어가게 된다.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한 뒤 외국인 인수합병규제를 완화하는 게 순서..."라는 기사는 재벌 구조조정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제목과 기사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주일간의 기사가 보여주는 동아일보의 논조는 특히 재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아일보가 보여주었던 논조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14일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변질된 법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논리에 묻혀 공정성 있는

논조를 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수언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중앙일보는 '재벌의 기관지'?

'98년2월11일~17

중앙일보 모니터팀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파업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주요하게 보도한 중앙일보는 여전히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파업과 관련 제목을 선정적으로 단 경우가 많았으며,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우려 섞인 발언들을 인용,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중앙은 12일자 1면과 3면의 머리기사에서 각각 <파업하면 제2환난>, <파업이 달리 쫓는다 경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IMF나 외국투자등급회사의 우려성 발언을 인용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일어날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현재의 모든 문제를 민주노총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3면 기사에서는 'IMF 경고'라는 제목에 부합할만한 경고내용은 없었으며 단지 외국의 우려 섞인 시각을 'IMF 경고'로 왜곡 보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앙은 13일자 <노동 제2환난 원하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조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상층부의 힘겨루기가 파업의 원인

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같은 날 <제2환난 책임 지려는가>라는 제하의 사실에서도 중앙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곧 '환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업의 배경을 왜곡하고 경제난의 주요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태도는 현 구제금융시대의 책임자로 지목 받는 재벌과 관련한 보도태도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 재벌개혁과 관련, 보도를 자제하면서 지주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벌에 불리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중앙은 <경제정책 앞뒤가 안맞는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혼선을 빚는 정책들이 많다... 이른바 빅딜이나 그룹 기조실, 회장실 폐지처럼 '기업구조조정'이란 IMF의 원칙적 요구를 확대 해석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재벌개혁과 관련한 경제정책을 '혼선'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같은 날 3면에서는 <즉흥처방 부작용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재벌개혁과 관련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비판일색의 내용을 실고 있어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12일자 사실에서 재벌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논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다우코닝사 유치 실패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 기사 역시 정확한 투자과정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못한 채 '일사천리이지 못한' 행정의 잘못만을 비판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중앙일보의 보도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왜곡하고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주장하는 등의 편파적 태도를 통해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정적인 노동절 보도>

폭력성 부각에 급급...감정적 보도로 일관

'98년 5월1일~5월3일

조선, 중앙, 동아
신문모니터분과

현재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1백 60만 명에 이르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말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과 학생 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의 울분이 가시화 될 만한 집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 집회에 대한 언론보도가 과거 어느 때 못지 않게 왜곡·편파보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은 시위의 과격함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집회참가자들의 폭력성만 비판할 뿐 이날의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이 없다. 더욱이 이날 예상을 초과한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여 인도로만 행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회참가자 대다수는 공권력의 과잉대응으로 폭력양상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입장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총련 학생들의 개입으로 시위가 과격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만을 부각,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5월 2일자에서 전날의 집회를 단신 보도하는데 그쳤던 대부분의 신문이 5월 3일자 1면에서 일제히 "폭력집회에 단호히 대처"(조선), "불법·폭력 집회 용납할 수 없다"(중앙), "폭력집회 용납 못한다 외자유치 악영향 우려"(동아) 등 전날의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의 한겨레신문을 보면 <청와대입장/강-온양면 노동계 달래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동절 폭력시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향이 '합법집회 과정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불거진 불법시위 분리 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서든 2기 노사정위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해법으로 보인다...노동절 시위를 계기로 2기 노사정위의 성격도 좀더 분명해졌다. 김 대통령은 2기 노사정위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하여 다른 신문과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선

신문들이 김대통령의 특정발언만을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동절 집회와 관련 대부분의 신문이 사실을 신고 있다. 조선일보는 「망국적인 폭력시위」라는 제목으로 이날의 시위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과격화' 주장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이 사실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일부 강성 근로자들은 폭력적 불법시위를 남발해 우리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상태를 만들어 놓았고, ... 운동권 일부 학생들은 또 결핍하면 폭력시위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외국인들의 대한 투자의욕을 꺾어 놓았다. 그레놓고도 이제 와서 또 다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조직적인 폭력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를 망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실의 주장대로 '폭력시위'가 고비용-저효율 상태를 만들었고 외국인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놓

았다는 것은 심한 논리적 비약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분명치 않아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조직적인 폭력시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폭력시위 단호히 대처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금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주장과 정부의 정책이 같은 방향인데도 폭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명분없는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이 다수 노동계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노동계의 주장이 같은 방향이라는 전제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계의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이를 '화풀이'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와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그야말로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불안 지속면 한국 신용상향 어렵다”

S&P II월 11일 12월 연노총 방문 동향상임 예정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S&P)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98년 노동절 집회'를 계기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노동계 불안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투자의욕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노동계 불안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투자의욕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노동계 불안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투자의욕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력집회 용납 못한다 外資유치 악영향 우려”

김대중 대통령 2일 청와대 방문 동향상임 예정

노동계와 정치권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98년 노동절 집회'를 계기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노동계 불안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투자의욕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방문 동향상임 예정

<언론의 '빅딜' 죽이기>

재벌 구조조정안 정치논리로 폄하...소극적 보도로 일관

98년 6월11일~17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문모니터분과

IMF 통치체제를 물고 온 데에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큰 책임이 있다. 부실화한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은 채 내부자 거래, 차입경영 등으로 근근히 버티며 알짜기업들의 경영상태마저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룹간 빅딜을 제기했다. 그간 대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단골메뉴였던 빅딜이 청와대 김종권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신문은 빅딜이 가져오는 효과와 문제점,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등을 기사화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치논리를 제기하여 빅딜 발언을 해프닝으로 몰아 세우고 있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빅딜을 정치논리의 부산물로 호도

조선일보는 6월 15일자 사설 <(정치)가 주무르는

빅딜>에서 “정치권이 재계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간섭할 경우 결국엔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게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이... 빅딜만이 살길이라고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칫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빅딜을 재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재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배제한 채 재벌의 이익에 근거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으로 지적 받았다.

또한 6월 12일자 7면 <비서실장 빅딜발언 일과만파>에서는 빅딜의 진원지로 추측되던 박태준 총재의 경악한 모습과 정치권 내의 갈등, 음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화하고 있다. 재계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언급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13일자 6면 <DJ 비서 빅딜발언 질책전화, 여권 김종권 파문 진화 서둘러>에서는 '빅딜'이 잘못 보도된 것처럼 기사화 하여 해프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6월 11일자 5면 <흔들림 없는 개혁 흔들리는 재계>에서 “초유의 경제구조 조정은 김 대통령이 국정관리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노사정위에서 재계 개혁을 요구한 노동계 주장을 반영하였고 국민적 지지와 확대를 바탕으로 정계개편을 가속화 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빅딜'을 DJ정부의 정계개편을 위한 정계개편을 통한 정국타계용으로 간주하는 일부의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서 결국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겨레는 6월 12일자 사설 <재벌 사업 교환과 정부개입>에서 대기업간 빅딜의 난국돌파의 기폭제로서 시장자율은 시장이 살았을 때 가능하며 지금처럼 시장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빅딜이 따르는 휴유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빅딜 해결이 곧 재벌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다.

재벌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신문 보도

대기업간 빅딜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3월. 당시 대부분 신문들이 추측보도까지 해가며 빅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커다란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언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빅딜이 왜 제기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빅딜이 '해프닝'으로 끝나자 언론들은 경제정책 혼선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시장경제 논리를 중시할 것'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의 이같은 요구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는 당위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중 김종권 비서실장이 '빅딜'을 공식화하자 언론은 다시 빅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나섰으나 보도 태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빅딜의 대상 기업과 업종에 대한 기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기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빅딜로 초래될 문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에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15일자 사설 <정치가 주무르는 빅딜>에서 “정치권이 재계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간섭할 경우 결국엔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게 분명하다.” “정치권이...빅딜만이 살 길이라고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칫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빅딜을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계의 이해'에만 머물러 진전없는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기사에서는 빅딜 발언을 정치 논리로만 파악해 본질에 비껴 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11일자 5면 <흔들림 없는 개혁 흔들리는 재계>라는 기사는 “초유의 경제구조 조정은 김 대통령이 국정관리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구조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일보도 12일 기사 <비서실장 빅딜발언 일과만파>에서 빅딜의 진원지로 추측되던 박태준 총재가 경악한 모습과 정치권 내의 갈등, 음모 등을 다뤄 빅딜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날 한겨레는 <재벌 사업 교환과 정부개입>이라는 사실을 통해 “시장 자율 기능이 살아 있을 때는 대기업간 빅딜이 이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반강제적인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다른 신문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빅딜이 해당 기업의 처지에 따라 엇갈린 경제적

독실을 초대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보도태도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 지지해 온 신문들이 대기업간 빅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시장경제 원칙의 붕괴처럼 묘사하는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신문들은 이 같은 보도태도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 층의 이해만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주무르는 빅딜

현재 삼성 LG 등 대기업이 빅딜(기업합병)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문으로 재계가 들쭉거리고 있다. 우리는 재계가 19년 만에 합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또 빅딜이 기업 구조조정의 합리적 방안인지도 현재로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얘기는 지난 재계의 사활(死活)이 걸린 구조조정 방안이 과연 경제부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당의 총재가 재계에 빅딜을 종용했고, 그 내용이 대통령 비서실장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정책 책임이 있는 정권 지도자가 빅딜을 종용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경제부처 부서는 무용지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것이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린 정치인들의 자기일방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결국 정치의 소도구가 되어 훼손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국가의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가르쳐 준다. 그러나 정치권이 경제에 간섭하면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부는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기득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립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정부 들어 재계와 정부 주체가 손을 잡고 기업합병을 통해,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과 별개로, 재계와 정부 주체가 손을 잡고 빅딜을 추진하는 데가 다르면, 대신기업합병을 얘기하는 재계의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기도 하다. 게다가 총리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경제고문, 실권당 정책의상 등 여러 기관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구조 때문에 경제계 이해당사자들의 양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에 정부 총리가 나서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합의나 경제가 산으로 올라갈지 떠나고 올라갈지 판단의 혼미와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실정이다.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의 살아남을 위해 경제의 경쟁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꼭 빅딜이나 기업합병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채 빅딜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새 정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빅딜은 경제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2. 대북보도



언론의 안보상업주의

새 정부의 꾸준한 대북 햇볕정책 기조는 대북관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보수언론들의 탄핵절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안기부의 '북풍조작'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고 여야간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한낱 정치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지나치게 여야간의 정쟁으로만 몰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북한 잠수정 사건, 위성 발사 사건 등을 계기로 언론들은 감춰져 있던 예전의 안보상업주의를 다시 드러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실확인도 소홀히 한 채 이를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대북강경노선을 부추기는 계기로 삼아 극우언론의 전형을 보였다

<북풍조작사건 보도>

진상규명 뒷전...공방보도로 사건의 초점 흐려

98년3월4일~10일

경향,동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신문모니터분과

지난 15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북풍조작사건'은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정치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 신문의 보도태도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공방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쟁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해 한겨레, 한국, 경향신문 등이 5, 6일자에서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는 등 비중 있게 다룬 반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를 축소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기부 내부 권력투쟁으로 축소보도

조선일보는 5일자에서 다른 신문과 달리 사회면을 통해 보도하는데 그쳤다. 또한 6일자 1면에서 '안기부가 북풍공작 주도'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다. 이후 계속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6일자 4면 <정가에 '안기부직원 살생부' 파문>, 7일자 1면의 <정형근

의원 서면조사>, 같은 날 4면의 <"여야, 북풍충돌...정치권 겨울오나>, 10일자 4면 3단으로 <돌파구 못찾는 정국현안, 북풍>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기사들은 안기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부각시킨다거나 여야간의 공방보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은 6일자 1면 머릿기사로 <안기부 대규모 肅正(숙정)>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번 사건을 마치 정치적 배경에 의한 '숙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6일자 5면에서는 <정계 개편 '북풍'타고 오나>라는 제목으로 "여 걸으론 부인하나 속으론 거야 목죄기" 라고 하여 역시 여권이 정치적 의도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같은 날 3면 해설기사에서 '개혁 왜 하나', '문제점 뭘가',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을 추적 보도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5면에서 <정계개편 '북풍'

타고 오나>, 7일자 3면에 <'북풍'까지 덮쳐 국회표류>, 10일자 5면 <여야 '북풍'싸고 또 한판>를 실으면서 의혹의 진상규명 노력은 사라지고 만다. 특히 7일자 3면 <'북풍'까지 덮쳐 국회표류>기사는 '북풍조작사건'을 국회표류의 한 원인으로 삼으며 공방보도로 몰아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같은 날 5면 <정계개편 '북풍'타고 오나>라는 제목 하에 '여 걸으론 부인·속으론 거야 목죄기'라는 해설기사와 10일자 5면 <여야 '북풍'싸고 또 한판>이라는 기사로 이어졌다.

더욱이 중앙일보는 7일 <대공기능 손상없는 개혁을>이라는 사실을 통해 "권력자의 일관성 없는 작위적 조직운동은 안기부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대공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와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며 이번 수사와 안기부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혁이 비합리적 인적 청산의 계기로 인상 지워진다면...국민회의 지향의 집단으로 바뀌는 데 그치고 말지 모른다" 라고 주장하여 새정부의 북풍수사를 표적수사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6일자 4면 <안기부 북풍 공작 문건>이라는 기사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매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면 아래에 4단으로 간단히 처리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정가에 '안기부직원 살생부' 파문>이라는 6단 기사는 위쪽에 배치하여 내부의 권력투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다음날인 7일자 4면에서도 "기관내 일부 그룹이 ...북풍업무 관계자 명단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권력암투적인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 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또한 7일자 4면 해설기사에서 조선은 "여권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야권은 북풍파문의 배경을 분석하며" 라고 표현하여 이번 사안이 여권의 정략적 목적으로 제기된 황당한 사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특히 조

선일보는 7일자 사설 <안기부 거둬 태어나기>를 통해 "정권마다 안기부를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안기부를 매도하기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안기부는 영원히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며 정치적 이유로 안기부가 희생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풍조작'에 대한 자기반성 없어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안에 대한 각 신문의 보도태도는 의혹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풍관련 조작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결가지는 무엇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의 발표에만 의존하여 추적·탐사보도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부분의 신문은 지난 대선 때 오익제 편지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북풍공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기부의 언론대책 문건의 평가대로 북풍의 확산에 기여했다. 곧 대형오보사건으로 끝나 버린 '주민납치'보도가 있었고,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양심수 사면' 발언을 정치쟁점화 시키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신문들은 재미동포 윤홍준씨의 김대중 후보 비난을 별 여과 없이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언론사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독자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모니터 기간 어떤 신문도 자기 반성하는 언론은 없었다. 다만 한겨레가 10일 <'북풍'없는 사회를>이라는 칼럼을 통해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 없이 진정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훈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풍공작과 권영해씨 자해사건 보도>

안기부 수사 조기 종결 촉구...진상규명 노력 회피

98년 3월18일~24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문모니터분과

1. '안기부 북풍공작' 수사 보도

'국가 혼란' 내세워 수사 종결 촉구

15대 대선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풍공작'을 사실상 지휘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등장하면서 급기야 권씨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들은 드러난 문건에 대해 '국가 기밀 유출' 운운하며 오히려 사실 은폐를 종용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 조선,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를 여야간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보기능 무력화', '국가 혼란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 등을 내세워 수사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등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중앙은 안기부의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 유출과 관련, 20일자 사설 <국가 관리 이래도 팬찮은가>에서 분단대치상황을 내세워 북풍공작 수사가 "안기부 자체의 무력화를 자초" 했으며 여당

의 북풍 문건 유포를 비난하고 나섰다. 같은 날 기사 제목들을 살펴보면 1면 머리에 <북풍' 조기매듭 시급>, 3면 <어설픈 문건에 온 나라가 혼란>, 4면 <경제가 급한데 여야 우왕좌왕> 등으로 제목을 달아 수사 조기 종결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조선은 19일자 사설 <세 후보측 제각기 뛰었다>에서 '이대성 파일' 내에 세 대선 후보의 대북접촉기록이 모두 있음을 부각시켜 이를 양비론적으로 비판하고 '북풍 정국'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에서도 세 후보의 의혹을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여권인 한나라당이 이러한 북풍공작의 분명한 수혜자였음을 감안할 때, 결국 '북풍공작'을 정치적 전반의 허물로 몰아가 여론과 수사당국의 진실규명 노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21일자 <북한이 웃고 있다>라는 제목의 김대중 칼럼에서는 "요즘 북한 당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남쪽의 정치인과 정보원들이 우리에게 줄을 대 이것 줄 테니



저것 하자고 조르더니 그 내용이 조금 드러나자 이제는 저희들끼리 북풍이니 조작이니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나쁜 X이라고 까발리고 있는 꼴이다"라며 북한을 빗대어 현재의 '북풍공작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북풍정국 조성에 앞장섰던 필자가 북풍공작 진실 규명 과정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기부는 정녕 수사의 성역인가?

한편 중앙은 18일자 사설 <북풍공작 무엇이 실체인가>에서 "기획입북을 유도할 만큼 우리의 정보전략이 그만큼 탁월한가. 북의 전술에 놀아났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무능력의 노출 아닌가. 남북 공작원들의 합작품이라면 우리는 누구 손에 놀아나는가 등등의 의혹과 불신이 국민들로서는 쌓일 수밖에 없다"며 안기부의 '북풍공작' 가능성을 희석시키는 가정들을 제시해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어 "이미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내부의 사기 또한 매우 저하돼 있다고

한다. 이야말로 북이 노리는 자중지란일 수 있고 북의 대남 전략의 결과적 성공이라 패재를 부를 수도 있다"며 북풍이 북한의 의도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다는 지적을 통해 안기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한편 북풍공작 수사가 대북 전문가들(안기부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수사가 중단돼야함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 역시 24일자 <이 혼란 누가 책임지나>에서 "혹시 신임 안기부장의 안기부 접근이 '점령군'같은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비쳐져 조직 내외에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을 초래하고 이것이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을 빚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안기부 개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북풍의혹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 것이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바로 이점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적 협상으로 북풍공작과 관련한 사실규명을 덮어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겨레 김근술 논설주장은 24일자 <적반

北風공작 무엇이 실체인가

도대체 북풍공작이란 세 가지 깊은 의혹의 산란으로 이뤄진 것인가. 처음에는 김대중 후보의 대북외교와 관련 안기부가 국가 기밀유출을 한다는 의혹 수순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흐르고 얼마 안되어 종래전술을 입수했다는 보도와 함께 의혹의 북이 조금 더 앞의 중추라고 했다. 국가안전기획장은 대북 관련 정보를 알수·분석해 대외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엄중 금지하고 있다. 안기부 고위 업무 담당자라면 수사당국이 좀 더 경계해야 한다. 알릴 것은 확실한 알리고 신중을 기하는 차를 엄중 유시해야 한다.

한편 한겨레의 정영진도 '북풍'을 필요로 했다. 언론의 불행은 이미 의욕한 중독자라면 안기부 자체에 대한 불신은 높일 수 있다. 대북외교 의혹의 방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안기부의 입북·전투 보고·TV출연. 그리고 김대중의 국제 동맹이 모자간기와의 대북공작에 대해 김대중 언론의 공개하는 하는 의혹이다. 둘째는 북한 당국에서 D-1수출을 위해 지원금을 벌인 것. 셋째는, 안기부의 공작원들이 중립이 가부결에 따라 서로 유린한 공작을 동시에 벌일 수 있다. 물론 이 모두가 의혹에서 출발한 근거없는 추측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제곱 거사가 몰려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런가 수사당국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획입북을 유도할 만큼 우리의 정보전략이 그만큼 탁월한가. 북의 전술에 놀아났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무능력의 노출 아닌가. 남북 공작원들의 합작품이라면 우리는 누구 손에 놀아나는가 등등의 의혹과 불신이 국민들로서는 쌓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내부의 사기 또한 매우 저하돼 있다고

이런 의혹과 불신이 깊어지면 안기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외국면이란 안기부대 대북 정보 시정엔 북풍을 수 있는 국가의 기본업무이다. 이미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내부의 사기 또한 매우 저하돼 있다고

이런 의혹과 불신이 깊어지면 안기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외국면이란 안기부대 대북 정보 시정엔 북풍을 수 있는 국가의 기본업무이다. 이미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내부의 사기 또한 매우 저하돼 있다고

하장의 정치>[아침햇발]에서 북풍공작수사에 대한 보수언론의 '적반하장'적 행태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북풍공작의 수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주로 야당인 한나라 당과 일부 언론의 비협조에 기인한다. 그들은 북풍공작의 수사와 조사를 정치보복 차원에서 해석하거나, 선거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내세우고 있다...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풍공작은 안기부가 옛 여권의 계속집권을 위해 획책한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북풍공작을 한낱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는 일부 보수언론이 지닌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2. '권영해씨 자해사건'

자해 여부에 초점...문제의 본질 흐려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자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안의 본질에서 크게 비껴난 채 오히려 관련 수사를 종결시키는 계기로 삼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우선 각 신문들은 '자해'나 '자살기도'나에 큰 의미를 두고 이를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사설에서는 권씨의 무책임한 행동을 질타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자해를 방치한 것에 더 큰 책임을 물어 검찰과 새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아가 서둘러 수사를 종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조선은 검찰 측이 공식적으로 '자해'라고 발표했음에도 신문들 중 유일하게 '자살기도'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 '용어 논란'을 부추겼다. 경향 역시 23일자 <의문의 칼>이라는 제하의 해설기사 서두에서 "자살기도라는 표현 속에는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려했다는 의미가, 자해란 말에는 정치성을 띤 의도된 행동이라는 정반대의 시각이 담겨 있다"며 그 의미차이를 부각

시켰다.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도 공식적으로는 '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자살기도에 가깝다'는 의도적인 입장을 더욱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림으로서 북풍공작수사의 흐름을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향은 23일자 사설 <권영해씨 자해와 진실규명>에서 "더욱 답답한 것은 검찰의 안이한 태도"라며 사건의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동아일보 역시 23일자 <권영해씨의 자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의 책임을 질타하다가 "그러잖아도 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불안하게 보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새 정부에까지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있다. 다음 날인 24일자 사설 <이 혼란 누가 책임지나>에서는 '자해' 대신 '할복'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확대된 데는 이종찬 신임 안기부장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소위 '북풍의혹'에 따른 '혼란'의 책임자로 이 안기부장을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있다. 중앙 역시 23일자 <권영해씨의 충격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씨의 자살기도는 정치권이나 수사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며 "전직 국가최고정보기관 총수를 대형 강력사건 범인처럼 떠들썩하게 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책임소재를 검찰 측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이 사건의 책임은 자해를 통해 사실을 은폐하려한 권 전 안기부장 자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엉뚱하게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검찰과 수사당국을 비판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수사의 흐름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처럼 '자해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도마에 올려 사실상 수사를 종결시키려 하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앞으로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즉각 고쳐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북한 잠수정 사건 보도>

신중한 접근 태도 결여...반복 의식 조장 통해 '햇볕정책' 비판

98년6월23일~30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최근 발생한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대체적으로 남북관계 보도에서 나타났던 언론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추측보도이거나 정부의 발표를 여과 없이 받아쓴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혼드는 언론매체도 있었다.

잠수정 침투 사건을 전후로 '소 보내기', '금강산 개발 합의' 등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안보상 업주의'를 내세운 선정적인 보도로 국익보다는 장삿속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

- '적대적 대북관' 강요하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모니터팀

조선일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선정적인 단어와 무리한 추측보도로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이 신문은 잠수정 출현 다음 날인 23일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을 먹꿨을 사용하면서 <"2년전 악몽 떠올라..." 잠못 이룬 동해안>으로 달았다. 이어 26일 사회면에서도 96년 생포된 이광수씨가 작전에 투입되어 해치열기 작전 중 "폭발물 설치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먹꿨 속내 따옴표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목으로 버젓이 지면을 장식했다. 이러한 제목들과 기사들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서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반복의식을 자극시키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의 공식발표 이후인 29일 사회면에서 <"공작원 만일 있다면", 軍 초기대응 등 느슨...지역주민들 불안>이라고 보도한 것 등은 사실 보도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적대적 대북관 조성'이라는 목적을 겨냥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조선일보는 24일, 27일, 30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쬐어 주어도...아무 소용없는 일"(24일자 사설), "「햇볕정책」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어서... 경직된 자세로 일관... 처음부터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마저 미흡했다"(27일자 사설). "안보가 흔들리면 외국 기업인들의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햇볕정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30일 사설) 이렇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하여 정부의 '햇볕론'을 비판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24일자 시론<또 잠수정인가 / 송영대>에서 "북한의 극렬한 정부 비방을 비롯해 민노총, 한총련에 대한 반정부 투쟁선동, 「8·15 판문점 통일 대축전」 제의, 국내 10여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통일토론회, 공동유적답사 제의"를 통일 전선 전술과 대남 공작에 박차를 가하는 예로 들었다. 이 기사는 출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서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중앙일보의 관심은 '금강산 개발'에-

중앙일보 모니터팀

중앙일보는 사건 초기에는 잠수정보다는 금강산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24일자 <유연하게 '포용정책' 유지>, <잠수정 왔지만 유람선은 보낸다>라는 기사 등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전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사설 <대북 경협-햇볕과 강풍사이>에서도 "문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회장이 확보한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이냐는

점이다"라고 하여 금강산 개발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금강산 개발에 따른 남쪽 단체나 기업간의 경쟁적 진출이 예상될 수 있다.....어느 한 기업의 독점도 걱정스런 일이다"면서 현대그룹의 독점적인 금강산 개발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그룹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에서 중앙은 '안보'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27일자 사설에서 중앙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도발 억제와 협력 증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9일자 사설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 보장책을 받아내야"고 하면서 "금강산 개발과 남북경협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일보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출처 없는 보도로 남북관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3일자 3면 <남북관계 전망>에서 중앙은 "민족 대단결을 표방하면서 근로자 파업과 한총련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이 기사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부정적 입김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균형'에서 '강경'으로 돌변한 동아일보-

동아일보 모니터팀

동아일보는 잠수정 출현 초기에는 다른 신문 보다 적은 기사량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접근했다. 24일자 사설에서 동아는 "현 시점에서는 과잉 반응도 안일한 자세도 모두 금물이다"라고 하여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았다.

또한 25일자 시론 <금강산 관광과 잠수정 침투

>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여 대북 유화정책에 제동을 거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어 "안보와 대화를 균형 있게 추구하자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라고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불과 이를 뒤인 27일 동아는 사설 <역시 도발이었다>에서 "정부가 아무리 햇볕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려해도 국민 여론이 용납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고 하여 앞서의 '균형'과는 달리 '국민 여론'을 빌어서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주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30일자 만화에서는 "쌀 주고 소 보냈고/ 다음은 선글라스 보낼 차례/ 눈 부실까봐. 햇볕론"이라고 햇볕론을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실었다.

4

언론의 과장보도 지적한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모니터팀

한겨레는 30일자 [아침햇발] <잠수정 침투와 월드컵>에서 "우려나 위기의식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 언론보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잠수정이 침투했으면 그것이 지니는 위협의 정도만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과장'과 '홍분'이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잠수정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는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위성 관련 보도>

'위험하고 오만한' 보도 태도...강경대응만 부추겨

98년9월2일~11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모니터분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무조건 남북관계의 위기를 조장하려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북한이 발사했다던 탄도 미사일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이번 위성파문에 대해 언론은 냉전적 보도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우리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노력은 뒷전인 채 일본과 미국의 강경대응을 부각시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강경 보도 두드러져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연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강경 대응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려진 후 조선일보는 9월 2일자 사설 <위험하고 오만한 대포동>에서 "북이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다시 용납

하면 버릇만 나빠질 것이다. 마땅히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그런데 발사 닷새만에 북한은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로 추정하는 미국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북한의 발표를 의례적인 선전공세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치부했다. 이와같은 태도 역시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북 "지난 31일 미사일 아닌 위성 발사">라는 제목 밑에 <미 "미사일 틀림없다">라는 제목을 더 크게 뽑아 미국 측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같은 날 3면에서는 일본의 오부치 총리와 외무성의 발언을 인용, <침단장비로 분석... "위성 아니다" / "국제여론 무마...내부결속 노린 듯 정말 위성이라면 몰랐을 리 없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인공위성으로 밝혀져 반복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의증을 반증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만약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 전반에 퍼졌던 『반(反)북한 분위기』는 상당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며 "그 자체로서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위성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서부터 <북 '위성 발사'했다면/미사일보다 더 위협적">(7일자 2면)이라고 제목을 뽑는 등 '위협'을 강조하였다. 또한 8일자 [軍(군)과 強(강)으로 가는 김정일 체제]라는 사설에서 "미사일인지 인공 위성인지 모를 [무기]를 발사"했다며 로켓발사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10일자 3면 머리기사에서 <"위성이든 아니든 중요치 않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능력에 더 주목>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의 강경대응 입장은 11일자 사설 <우리도 미사일 개발을>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 사설은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쏜 발사체 탄두에 인공위성을 실었는지 아닌지의 논란은 본말을 전도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경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5일자 머리기사에서 <북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정부 "내부 결속 노린 거짓인 듯">으로 보도한 후 8일자 4면에서는 <북 위성선전 게임 즐기고 있다>는 제목으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만으로 일정수준 전략·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10일자에서도 <'침묵' 닷새 뒤 "위성발사" 또 사흘 뒤 "광명성"/인접국 혼란 유도하는 단계적 선전술> 등의 제목을 뽑아 북의 선동에 의한 혼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 <북 미사일 무엇을 노렸나>에서 "햇볕론도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

편 7일자 사설 <북한의 위험한 발사 소동>에서는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예측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임을 과시...위성 추진 로켓이라면 더 위협적"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실확인 소홀한 채 위협성만 부각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그 목적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기술과 원리가 같다고 해서 '위협'만을 부각, 금방이라도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꼴이다. 더군다나 북한사회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보도태도 역시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이다. 한겨레 8일자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는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정확한 정보도 없이... 지레 겁을 먹거나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계할 일"인 것이다.

결국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무조건 남북관계의 위기를 조장하려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판문점 총격요청설 보도>

고문설 부각시켜 초점 흐려...진실규명 노력 아쉬워

98년10월2일~7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문모니터분과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쪽 관계자들이 북한 정보관계자들에게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위적 전시상황 조성' 혐의는 그 자체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만일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 '신증론' 내세워 사실규명 소홀

이와 관련 국민회의 등 여당은 '국가전복음모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피의자들의 진술 역시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각 신문들 역시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사실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를 보였다.

동아, 한겨레, 한국 등은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정쟁차원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동아일보는 10월 2일자 사설 <판문점 총격 요청 충격>에서 "수사당국은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실제적 진실부터 엄정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역시 10월 3일자 사설 <신북풍설 수사결과 기다려야>에서 "정치권이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한겨레의 경우는 가장 강도높게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한겨레는 10월 3일자 사설 <총격요청 정쟁대상 아니다>에서 "그 의혹을 풀어줄 책임은 당연히 이 총재의 몫이다"라며 "사건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어법'은 불안한 눈길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여 판

문 당사자로 지목된 이 총재의 책임있는 행동을 완곡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선, 중앙 등은 사실규명에는 힘써야 하지만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10월 2일자 사설 <북에 총격을 부탁했다고?>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어 "정계가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선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여 여느 신문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북풍사건' 때 과연 그런 도리가 지켜졌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때 김대통령이 당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또 지금의 정치가 발전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가려질 때까지 공허한 입씨름으로 사건을 어느 쪽이든 기정사실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얼핏보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신증론은 결국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2일자 사설 <신북풍 사건진상 밝혀야>에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야당 탄압이니 하는 정치적 항변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라면서도 "수사당국과 이들을 지휘하는 여권도 알려진 사건내용의 석연치 않은 점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며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더 나아가 이 사설은 "사건이 알려진 과정에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만약 수사결과 한나라당이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혐의를 미리 흘려 정치공세를 편 여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다.

정쟁 지양 주장하며 정쟁보도에 열을리는 조선·중앙일보

한편 첫날 사실에서 '정쟁을 지양해야'한다고 것과 달리 막상 일반기사에서는 정치권의 정쟁을 부각하여 초점흐리기식 보도를 두드러지게 한 신문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이다. 조선일보는 2일자 6면에서 <여 "반국가 범죄" ... 야 "이회창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는 <총격설' 정국 파국 치달아/여 "이총재 개입 드러나면 사법처리" 야 "안기부서 고문-조작...특검 도입을">으로 제목을 달았다. 특히 4일자 3면의 <벼랑끝 대치 ... 정상화 불투명>이라는 제목에서는 '진상규명'은 간데 없고 '대치'와 정상화가 어렵다는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10월 3일자에서도 조선일보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 많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등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4일자 <[이총재 몰아치기] 국정파트너나 퇴출 표적이나>는 기사에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판문점 [총격 요청설 정국]을 둘러싸고 정가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이다"며 이 사건이 '이회창 죽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처럼 기사화하여 초점을 흐리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3일자 1면과 4면 머리기사에서 각각 <정국 "신북풍" 대립 갈수록 격화/여 "배후있다... 철저한 수사를 "야" 조작이다... 특검제 도입을">, <격분한 야 ... 신중한 여>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의 '입씨름'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 균형만 유지했을 뿐 진상규명에 대한 접근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고문'조차 공방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각 신문들은 이번 사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고문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에 치중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0월 7일자 사설 <고문의혹 비켜갈 수 없다>에서 “국과수와 법원의 책무는 막중하다. 이들 기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여야는 진실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공방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역시 10월 7일자 사설 <‘충격정국’ 국회서 풀어라>에서 “고문은 민주사회임을 부정하는 결정적 징표이기 때문이다...고문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고문공방이 충격 요청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한다”며 고문공방으로 진실을 비켜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10월 6일자 사설 <북풍 고문주장 진상 밝혀야>에서 “고문 흔적이나 상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제기되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가혹행위는 형사법적 차원의 문제지 정치적 쟁점이 돼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실 없이 10월 7일자 4면에 <한나라당 안기부 고문 공방 2라운드>라는 기사에서 “열흘쯤 뒤에 나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고문공방」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공방’중심의 보도는 초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국면전환을 모색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다소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동아, 한겨레, 한국 등이 96년 4.11총선에서 등 과거의 북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앙, 조선은 이번의 사건에 대한 접근에서 정치권의 정치논쟁에 대한 기사를 주로 다루면서 핵심을 비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초점 흐리기가 아닌 진상규명 나서야

96년 4.11총선 때도 판문점에서의 긴장 국면으로 당시 여당이 극적으로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형성했던 일이 있었다. 이처럼 선거때마다 있어왔던 북풍이 집권세력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특정세력의 인위적인 작품이라면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죄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고문논쟁에 대한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고문논쟁으로 북측에 충격을 요청했다는 사건의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진실이 은폐된다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만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 나아가 언론이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또다른 이야기들

과거 보도 습성 여전

정권교체를 계기로 언론도 이전보다 진일보한 보도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와 달리 여러 사안에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그대로 나타났다. JP 총리인준문제 보도에 있어서는 여야 이분법적 시각에 기반한 양시양비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월드컵 관련보도에선 철저한 상업주의에 기반한 ‘냄비언론’적 속성을, 4.2 재보궐선거 보도에선 지역주의적 보도성향을 보여 비판의 초점이 됐다. 특히 3.13사면을 시작으로한 양심수 관련 보도에서는 여전한 냉전적 시각을 그대로 노출해 큰 실망을 안겨줬다. 피노체트 체포에 관한 국제보도에선 거의 외국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언론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JP 총리 인준 문제 보도>

양시양비론과 여야 이분법에서 못 벗어난 언론

98년2월24일~3월4일

동아,조선,한국,한겨레,경향,중앙
신문모니터분과

정권 교체 이전의 정치보도가 양비론과 함께 친여적인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이 친야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색깔'이 주목된다. 하지만 대부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무책임한 양비양시론'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신문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시각,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무엇이 문제인지, 새 정권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론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각 신문의 정치보도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 나아가 정치혐오주의 까지 불러일으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과거 정권이 낳은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책임을 일부분 지고 있는 야당에 대하여 언론이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독교세력의 편을 들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JP 총리' 의의만 강조, 정당성은 무시

김종필 총리 인준에 대하여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 기사를 실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식이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을 말하면서도 '김종필 총리 인준'의 정당성 여부는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없다. 언론은 김종필 총리 인준 문제로 국회에서 파행 과정을 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언론은 '검증' 작업은 무시하고 '보수'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식으로 그 '의의'만을 강조했다. 그 어떤 신문도 'JP총리 불가' 주장을 실지 않았다. 이는 김태동 경제수석 임명 당시 그의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서 흠집을 내려 했던 보도 태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동아·조선의 여당 비판은 정당한가?

총리 인준 파동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여당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논조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양비론을 펼치면서도 여당에 대해서 '일 처리를 성급하게 하면서 야당을 자극했다'라고 문제로 제기하는가 하면 투표 저지라는 여당의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조선일보는 2월 28일자 '류근일 칼럼' <JP나 정부구성이나>에서 "JP가 DJ와 동일 티켓으로 묶여 있다고 하는 여권의 주장은 보편타당한 구속력을 발휘하진 못한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JP 개인을 배척하는 것이지 DJ가 지명하는 다른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식이다. 김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일방통행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설득과 상호주의 정신으로 대해주는 것이 '한수 위'일 것이다"라고 혼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옹고, 여당의 '밀어붙이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다. 또한 <선제기습 말았어야>(3/2 사설)에서도 "정부가 더 유리한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현명했다"라고 여당의 정부조직법 공포에 대해서도 비난조였다.

이와 함께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정당당당하게 맞설 것을 요구하였다. <표결에 당당히 임하길>(3/2 사설)에서 "총리인준 문제는 야당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일단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궁색한 도피성 꼼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고 이기고를 분명히 선택하는 어제의 여당의 금도를 어제의 야당과 국민에게 보이기 바란다"라고 야당을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백지 투표와 이에 맞선 여당의 투표 저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야당지지 주장을 펼쳤는데, <법이 실종된 정치>(3/4 사설)에서 "...투표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옳지 않았다. 여권은 아마도 '표결=인준부결'을 거의 확실시했기에 서리체제를 의도적으로 출범시킬 요량으로 그런 방해작전을 쓴 것 같다. 권위주의 정치를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는 문민정치라면 무엇이 좀 달라야 할 터인데 그 질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잣대가 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양비론이 아니라 공정성의 잣대를 더욱 냉철하게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조직법 기습 공포>(3/1 사설)에서 "이런 식의 무리한 초강경 대응수법을 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추대로 막내린 인준국회>(3/3 사설)에서도 "총리서리체제는 국정과 의정 모두를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 국정 공백 상황은 빨리 해소해야겠으나 총리서리체제는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할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김종필씨가 결단을>(3/4 사설)에서는 "옳든 그르든 이것 또한 김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거대 야당의 집단 의사인 것만은 사실이다. 극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심해지고 국민 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김종필씨의 용퇴라고 본다"라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김종필씨의 용퇴까지 주장하면서 여당의 정국 운영의 서투름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 당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태도는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권력을 추종하면서 변신하는 언론

중앙, 경향, 한겨레는 이번 'JP인준 파동'에서 양비론과 함께 친여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새로 등장한 권력의 편에 서는 카멜레온적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정권교체 이후

그 논지가 대단히 친여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국정공백 끌어선 안된다>(2/27 사설)에서 "과거 자기들이 비난해마지 않던 국회 보이콧이란 구태의연한 방식을 이제 와서 자기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야당에 대하여 강경하게 비난하면서도 여당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경제위기 속에서 야당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안이한 판단 등으로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유화적인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인준시비 빨리 매듭지어야> (2/28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이 인준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순리며, 비록 반대를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따라줄 것"을 요구했으며, <여야 모두 왜 이러나>(3/2 사설)에서도 "한나라당이 구시대의 야당식 존립방식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에도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백지, 기권 투표를 예사로 발상하는 것은 국정경험을 가진 '새로운 야당'을 자처하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태도는 현 정권이 재벌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울 때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중앙일보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재벌 옹호 논리를 펼치는 데 적극적인데 반해, 여당과 야당의 갈등에 있어서는 여당 편을 드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벌언론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향신문은 역시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친여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순리 따라야 할 임명동의>(2/28 사설)에서 "양당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김 총리 지명자가 ... 공직에 취임할 아무런 법적 하자가 드러난 것도 없다"라고 JP총리 인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회 인준 투표 중단 사건에 대해서도 양비론으로 접근하고는 있지만 "

한나라당은 그간 여당 측이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의 '기권 작전'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경고해온 만큼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행동했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야당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갈길 험난한 김종필내각>(3/4 사설)에서도 "김총리 서리가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첫 내각은 마치 내각책임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내각책임제를 실험하려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호평까지 하고 있다.

'JP 인준' 문제에 있어서 재벌언론인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자신들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었다.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당 편에 서서 지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양비론이란 틀 내에서 공정을 가장한 편파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펼치는 케케레코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역시 친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노력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새로 탄생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입장이다.

<'총리 인준' 슬기롭게 풀어야>(2/24 사설)에서 "(JP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좋고 나쁨을 떠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국회 인준이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라고 'JP총리'의 정당성 문제를 접어두고 넘어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했다라도 의원 개개인이 '자유투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준국회' 순리의 정치력>(2/28사설)에서도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가 많은 인물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면 국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은 옳지 않다. 우리는 백지투표 등 당론의 실현을 위해 무리

한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경계한다"라고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펼쳤다.

돋보이는 한국일보의 주장

한국일보 역시 <한나라당 왜 이러나>(2/25 사설), <한나라당의 국정공백 책임>(2/26) 등을 통하여 야당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비밀투표 이외에 방법 없다> (3/1 사설)에서는 "여권은 '김종필총리'가 대선 민의라고 우기기에 앞서 승자로서의 아량을 먼저 보였어야 마땅하다. 김대중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약속은 상당한 득표요인이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 김종필씨의 몇몇치 못한 과거 때문에 이를 회피했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여당을 비판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신문과 구분되고 있다. 또한 "여당 또한 국회 표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미리 밝혀야 한다. 김종필 총리안이 부결되면 서리체제로 가겠다는 등의 발언은 국회 표결결과를 무시하겠다는 횡포다"라는 등 여당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적극적이었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선정·추측 보도

'JP인준 투표 거부'에 대한 보도들은 지면낭비라는 비판이 적절할 정도로 선정적이다. 또한 JP인준 거부로 인한 정계개편 등에 대하여 추측보도를 남발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흥미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목들을 살펴보면, 동아일보(3/3)는 "여 강공은 의정 무시 독선", "전부 백지다 중지해", "투표방해 말라", "강압 투표 무효", "과반 참여 유효", "여 '이탈표 공략' 야 '원천봉쇄'", "야 백지-기권 투표면 여 '육탄저지'", "小興 '당할수만은 없다' 정계개편 앞당길듯", 조선일보(3/3)는 "여, "재투표해야" 야, "개표만 남아", "야, "서리체제 강행면 가처분 신청" "우린 법대로 했다.. 여에 파행

책임"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3/3) "정신못차린 여야 '준비된 여' 실종 '성숙한 야' 헛말", "JP 총리 서리체제 정계개편 서곡 울리나.../여 '야 와해' 나설득... 경제청문회, 정치권 司正 등 변수/국민기대 저버린 여야 힘대결/巨野 돌파 승부수... 판개혁 태풍 예고"가 대표적인 선정보도 사례다.

기타 신문들도 몇 개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투표 중단 과정에 대한 취재기사와 함께 그 파장을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도들은 다분히 기사의 '상품성'만을 노리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서 독자들에게 정국 판단 및 상황 인식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JP 총리서리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갈등에 대하여 언론의 기존의 보도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제도와 정치인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언론이 정치보도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색깔이 없는 양시양비론, 흙탕물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국회,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한 정세분석,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쫓아다니는 언론인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김현철 비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권력형비리를 보아왔고, 그 결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언론이 제대로 권력에 대한 감시를 못했고, 또한 기득권층 이익 옹호에만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을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도 언론은 참회하지 않고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기득권 집단인 한나라당 편들기, 신생 권력집단에 대한 봐주기로 구분되는 언론의 모습은 진정 정도를 걷는 '참된 언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3·13 사면 보도>

'대화합'(?)의 그늘에 가려진 양심수 사면

98년3월14일~19일

조선, 동아, 중앙, 한국, 한겨레, 경향
신문모니터분과

지난 3월 13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민가협을 비롯하여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던 다수 국민들은 많은 양심수들이 제외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각 신문은 '550만명'이라는 숫자를 부각하여 대화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내용에서도 '대화합' 이라든가 '무난하다', '국민적 동참' 등 미사어구를 남발하여 기대에 못 미친 사면내용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경향, 대화합 부각 두드러져

이러한 태도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두드러진다. 동아일보 3월 14일자 사설 <건국이래 최대 사면>을 보면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려 과거를 과감히 털어 버리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 이번 조치가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다"고 쓰고 있다.

같은 날 경향신문 2면에는 <보수·진보 흑백논리 배제/ '국민정서'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면이 마치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4면에 실린 <3·13특사를 결속의 촉매로>라는 사설에서도 경향은 "정부가 이번 사면에서 은전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자 한 노력은 여러 대목에서 눈에 띈다...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도 눈에 띄는 관용을 베풀었다...사회안정 침해를 우려하는 보수여론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는 조심성을 보였다"등 이번 사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반면 중앙일보는 3월 14일 사설 <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에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이다"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국·공안사건 관련자 선정도 대부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공안사범중 미전향 장기수 7명을 포함시킨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인도적인 면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지만 혹시 앞으로 공안정책이 흔들

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하여 극소수의 '양심수' 석방마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앙, 박노해씨 사상변화 왜곡 가능성

같은 날 사회면에서 중앙은 <사면서 빠진 '노동시인' 박노해...경주교도소서 회견>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2~3년 더 공부(옥살이)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어 마치 박노해씨가 이번 사면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에 대해 별 이견 없이 순응하는 것처럼 쓰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기사는 "정권이나 체제를 상대로 한 투쟁보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뀌어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메리칸 드림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는 미국 자본주의가 가장 앞선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박노해씨가 감옥생활을 하면서 사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의 시집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의 입을 빌어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심수 사면 논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박노해씨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번 사면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견해에 쐈기를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사는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반성' 실천하며 변화된 삶을 살 기회 달라>는 제목의 박노해씨 기고문과도 비교할 만하다. 한겨레신문의 투고를 보면 "감옥에 손발이 묶인 채 강요된 '전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전향서를 강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여 '순응적'인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과 대조적이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박노해씨의 창구역할을 하는 부인의 투고문이라는 점에서 한겨레신

문 내용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중앙일보의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심수 보도 외면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사면관련 기사에서 양심수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3월 14일자 2면과 3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각각 <자적시행 제한 없어져>, <면허정지자 핸들 잡을 수 있다> 등 운전면허 별점삭제나 교통사범과 과실범, 경미사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면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심수'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안사범' 혹은 '미전향 장기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여전히 '양심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양심수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러한 의혹은 다음날인 15일자 <새 정부와 북 인권>이라는 사설에서 더 증가되었다. 이 사설은 "매년 수십만 톤의 식량을 국제기구로부터 받으면서도 인권개선 요구가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내정간섭」이니 「제국주의 논리」라며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뜬금없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사면 다음날인 14일자에는 별 언급이 없다가 다음날 북한의 인권을 소재로 사설을 쓰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교묘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겨레, '양심수 사면' 거론 돋보여

다만 한겨레신문을 보면 14일자 사설 <양심수 석방 꼭 아쉽다>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뺏다"는 주장은 "본인들이 범죄를 누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던 역대

군사정권의 주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상 전향 강요'는 일제 때의 부끄러운 유산으로서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은 "김 대통령은 양심수들을 대폭 사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 부문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양심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단면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권위주의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의 바람마저 차가운 감옥에 묻어두는 점이 그렇다. 언론은 자신들이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국민들도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과 그것을 비난,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벗지 못한 보리색 수건



<박시백의 그림세상 (한겨레) >



<4·2 재·보궐선거 보도>

지역주의 조장, 경마저널리즘 등 구태의연한 선거보도 행태 재현

98년4월1일~7일

조선, 동아, 중앙, 경향, 한국,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지난 4월 2일 실시된 재·보선은 정권교체 이후 새 정부의 운영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 신문의 보도가 기존의 지역주의, 흑색선전, 경마저널리즘적 경향, 선정적 보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주의 조장, 선정적 보도 여전

조선일보는 4월 1일자 4면에서 <'굳히기', '뒤집기' 막판 '표사냥' > 이라는 큰 제목과 <달성 '10% 우위'에 '박빙' >, <부산서 1-2위 서로 우세 주장 >, <문경, 예천 부동산 아직도 30%-40% >, <의성 동서 양분... 선두 안개속 > 이라는 4개의 부제를 단 기사에서 오직 투표율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책이나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2일자 5면에서도 조선은 <선거 승률 따라 정치권 '요동' >, <한나라, 2곳 이상 잃으면 탈당사태 >, <국민회의, 1석이

라도 얻으면 자신감 >, <자민련, 전패 아니면 TJ위상 강화 > 라고 제목을 다는 등 정계개편이나 정치인의 입지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전의 선거보도와 마찬가지로 정치게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4일자 <정체성 찾는 계기로 > 라는 사실에서 조선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승리는 영남지역의 정서를 다시 한 번 확인케 했다"며 "한나라 당은 이제 혼미와 방황을 끝내고 자체의 정체성을 다잡아 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실린 <기회주의 정치 > 라는 사실에서는 "한나라 당이 재보선에서 모두 승리하여 모처럼 단합과 재기를 다짐한 날 찬물을 끼얹어 당을 떠난 정치인들의 뒷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구태의연한 정치싸움』 을 비난했지만 그들의 선택 또한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라고 썼다.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승리'를 계기로 보수정치인의 단합을 독려하고 탈당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입장을 옹호하는데 급급한 태도

를 보임으로써 한나라당 기관지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동아일보는 4월 1일자 6면에 <지도부 총출동 '막판 票心 유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회의는 거리유세에서 엄후보가 지역적자,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외지인임을 은근히 강조", "한나라당은.....자민련을 겨냥 전라도 정권에 빌붙은 '셋방살이당', 흑부리당', 기생정당'에 불과하다고 맹공했다"는 등 선정적 용어를 남발하는 흥미위주 기사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일자 4면 3단의 <고개 든 '지역감정' 사그라든 '북풍'>, <문경-예천 '소지역주의' 판처>, <대구선 '박근혜 족보논쟁' 시끌>이라는 제목은 지역주의, 북풍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기사에서는 "37년간 지켜온 경상도 정권을 전라도에 뺏겼다", "박정희-김대중 대결론" 등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비판받았다.

중앙일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은 선거 하루 전인 4월 1일자 4면에서 <국민회의 영남교두보 만들까>, <자민련 여당론 과연 통할까>, <YS턴발 PK어디로 갈까>, <박정희 향수 표로 나타날까>라는 4개의 부제를 달아 각 정당의 정책보도 보다는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3일자 5면은 <政界개편 당분간 제동>이라는 제목과 <한나라 표발 守城, 野의원, 與 바뀌 타기 일단 주춤할 듯>이란 부제는 선거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성향분석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을 기사화하기보다는 정계개편의 저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향신문 1일자 4면 <한치 앞 안 보이는 '黃砂' 판세>라는 기사는 <부산서구 정문화-곽정출 후보 선두권>, <대구달성 격차 줄여 '투표율에 달렸다.>, <의성 박병...문경, 예천은 2파전 압축>이라고 부제를 달며 공약이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느 후보가 승리할지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일자 4면 하단 <'혹시 票 젖을라' 혼신

의 雨中 유세>라는 기사도 부제로 <정문화-곽정출 대혼전>, <朴 '굳혔다' 嚴 '뒤집어'>, <박병에 '이삭줍기' 총력>, <부동표 잡기 '로드쇼'> 등으로 잡아 선정적인 보도행태로 지적됐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이들 신문과 약간의 시각차를 보인다. 한국일보는 1일자 4면 <또 다시 지역 감정 들추기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부 후보들은 낮뜨거울 정도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지원에 나선 당지도부도 이를 부추기고 있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주의 양상을 경계했다. 또한 같은 면 하단의 <자민련-한나라당 연일 진흙탕 비방전>이라는 기사는 "자민련이....한나라당 붕괴는 시간문제... 한나라당도 자민련은 쓰레기당...양당간의 감정의 앙금...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넌 양상"이라고 기사화하며 각 당의 상호비방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한 정계개편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자 2면 하단의 <"한표라도 더..." 후보들 봄비 맞으며 강행군>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대구 달성 朴 嚴 후보 승리장담...."뚜껑 열어봐야 알 것">, <문경, 예천 자민련 "안정권 진입" 한나라 "막판 뒤집기">, <경북 의성 1-2위 1000표대 差...申후보 득표에 촉각>, <부산서구 鄭-郭 후보 2強 판세 "30% 득표가 당선권">라는 부제를 달면서 선거구 상황을 스케치 기사로 일관하고 있다. 4면의 <與 "빅뱅계기" 野 "내분붕합"기대>라는 기사 역시 "여권은 2승이한나라당의 분열이 촉진되고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계개편의 속도와 폭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릴 것으로" 등을 기사화하며 여권의 승리에 따른 정국분석을 정계개편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한국일보는 3일자 5면의 <야 싹쓸이...정계개편 일단 숨소리>라는 기사에서 "의석확보에는

실패했지만...대구에서도 일정한 득표로 가능성을 확인..."이라고 하여 한나라당 중심의 분석에 급급했던 조선, 중앙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한국일보는 3일자 4면 <'지역주의'로 호른 영남 票心>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지역벽은 두꺼웠다", "자민련 후보들은 지역한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 조선, 동아, 중앙과는 달리 지역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4일자 4면 <영남 再補選(재보선)의 반성>이라는 기사는 지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실렸다. 그 내용을 보면 "선거과정에서 이 지역의 오랜 「반 김대중·반 호남」 감정은 노골적으로 자극되었다. 야당은 주로 신정부가 정부 요직에서 호남인을 중용한 것을 빌미로 삼았지만 근본적으로 영, 호남간이 비우호적 감정을 이용했다", "소지역 감정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전근대적 울타리 안에 월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도 입으로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큰 수리를 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권은 진정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해 권력을 쟁취

하려는 망국적 유혹을 떨쳐 내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하여 보선평가에 타 신문과 있어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는 1일자 <유감스런 재보선 앙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치체제의 후진성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쟁기려는 구태가 반복", "말초적인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형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비판"을 기사내용으로 하며 정치권의 지역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4일자 3면의 <선거결과 겸허히 수용하기를>이란 사설은 "여당은 그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여당의 괄목할 만

한 지지를 상승", "질실할 정치적 쟁점이 없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세워 동정표에 기대는..."등을 기사화하며 선거기간 내에 나타난 문제점을 차분하게 지적하고 있다.

호남편중 인사가 지역주의 불렀다?

동아일보 4일자 3면에 실린 <反DJ 정서에 '호남 편중'인사 불만 겹쳐>, <巨野 자신감 회복 '3인탈당' 초강경 대응>이라는 부제는 선거의 지역대결 구도의 원인이 김 대통령의 인선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같은 날 <재·보선 야당석권의 의미>라는 기사에서도 "한나라당은...지역정서를 부추기며 유권자를 현혹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의 상위직에 호남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시켰다...김대통령이 비슷한 잘못을 한 것은 국가에도, 김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일깨워 주었다"며 양비론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일보는 1일자 7면의 <아직도 지역감정인가>라는 기자칼럼에서 "정책대결과 인물 됴됨이 실종", "정치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호소하는 후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혼탁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깨끗한 한 표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문 역시 지역주의의 원인을 "지역편중으로 비치는 인사라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들 신문이 영남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 거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후보들이 영남권의 뿌리깊은 반호남 정서를 의도적으로 자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편중 인사에서만 여권의 패배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편 3일자 7면에 실린 기자칼럼 <險口(협구)전쟁>에서는 "새 정부의 지역편파 인사 「영남 푸대접」 어느지역 출신 몇 %라는 도식에서 출발," 얼마나 공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바람직하다."라고 기사화 하였다. 이는 조선, 동아, 중앙 등의 신문이 지역주의 조장의 원인을 호남편중인사에 기인한 것으로 비약하고 있는 것과 다른 논조를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향수’ 자극하는 박근혜 후보 보도

한편 각 신문은 박근혜씨와 관련, 흥미위주의 기사를 양산해 비판받았다. 조선일보 2일자 5면 하단의 <다른 길가는 박정희 사람들>이라는 기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들이 갈려 뛰고 있는 현장을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3일자 35면 <야당의원으로 돌아온 朴槿惠씨>라는 박스기사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눈물", "운동원들 '새마을 노래' 합창"이라고 부제를 달면서 "박씨는 하루 30회가 넘는 거리 유세 등 약착같은 선거운동으로 아픔을 이겨냈다" 등 박씨 미화에 급급, 국회의원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한 채,

'박정희 향수'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아일보 역시 4월 1일자 23면 <새마을 노래 다시 부른 '대통령의 딸'>이라는 제목기사는 "지하에 계신 아버님의 이름이 욱되지 않도록", "근혜씨를 세상에 불러낸 것도 아버지였다", "아버지, 어머니 사진의 피켓을 흔들고 새마을 노래를 불러가며 보선에 승리했다" 등 무분별한 박정희 미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 박씨의 정치적 포부나 각오보다는 그녀가 갖고 있는 배경과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3일자 4면 <아버지가 못 다한 뜻 펼쳐나가겠다>라는 박근혜씨의 인터뷰내용은 "상대방 후보는 달성군 선거사상 유례 없는 금권선거를 거리낌없이 했다" 고 하는 등 상대후보 비방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일보 3일자 5면 "박정희 家의 승리, '대통령 딸' 처 選良 "아버지 뜻 이루겠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박씨에 대해 "단발성 화제만을 제공한 채 1회성 스타에 머물고 말지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쓰고 있어 타 신문이 미화일변도의 논조를 보인 것에 비해 긍정적 태도라는 평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각 신문들의 보선에 대한 선거보도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보도하기보다는 정계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인의 '편가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보도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는 혼탁선거와 지역대결구도에 대해 비판성 기사가 적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정리 : 권오중)

<월드컵과 냄비언론>

찬사에서 비난 오락가락...승패 집착하는 '냄비언론' 극치 보여줘

98년6월17일~23일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경향
신문모니터분과

월드컵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나친 흥분과 선정성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된 '영웅만들기'식 혹은 집중사격식 보도는 냄비언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차범근 감독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도는 '영웅 만들기'와 '집중사격'의 극단을 달렸다는 평가다.

승패에만 집착, 호들갑 떠는 '냄비'언론

작년 일본전에서 승리한 이후 차범근은 국민적 영웅이었다. 서울신문 97년 11월 8일자 25면의 <"불멸의 스타" 차범근(컴퓨터와 더불어)>을 비롯해 국민일보 97년 10월 6일자에서는 <"한국 축구의 승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으로 다루어 '신화 만들기'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한겨레신문 97년 10월 28일자에는 <차범근식 정치>가 등장하였고 한국일보는 급기야 97년 10월 6일자 5면 칼럼 제목을 <정치를 축구처럼만 하면(동창을 열고)>이라고 달았다. 이 칼럼은 "차범근 감독

같은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래야 하석주, 유상철, 이상윤 같은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듯이 장관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기는 것도 아닐까"라고까지 쓰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전 참패 후 언론보도는 180도 선회했다. 한국일보는 98년 6월 21일자 <"예정된 네덜란드전 참패">에서 "선수들은 부족한 기량을 메우기 위해 발에 쥐가 나도록 뛰었지만 참패했다는 것은 결국 감독의 전술부재와 용병술 실패에서 패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또한 같은 날 <[차범근 감독 경질 과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한국축구가 가진 총체적 문제점의 희생양인가, 개인적 무능이 부른 파멸의 종착역인가"라고 썼다. 이러한 보도는 앞서 19일자 <한국월드컵 대표팀 '마르세유'입성>라는 보도에서 마치 16강 진출이 확정된 것처럼 열을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동아일보도 6월 21일자 사설 <마르세유의 치욕>에서 "세계인의 눈이 집중된 월드컵 무대에서 최

악의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국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수긍하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앞장서서 '최악의 망신', '치명적인 상처' 등의 극단적인 평가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 역시 같은 날 사설 <한국축구 이대론 안된다>에서 "잔디없는 맨땅구장에서 기본기보다는 이기기 위한 잔재주만을 익히고 있는 한국 축구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마치 조롱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6월 21일자 사설 <한국 축구의 현주소>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16강 진출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였다"면서 "기대치를 밀도는 전력임이 분명한데도 16강 진출의 꿈을 계속해서 가능성으로 키운 우리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외국과의 전력 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제난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편승해 축구열기를 부추긴 느낌마저 든다"고 하여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일한 신문이다. 그러나 막상 지난 5월 21일자 <프랑스 월드컵 겁낼 상대는 없다>에서는 "한국은 역대 최고인 20위에 랭크됐다. ... 현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FIFA 랭킹 3위에 올라있는 체코와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네덜란드라고 못이길 이유가 없다. 5번째 본선에 진출하는 한국, 본선경험 있는 선수가 7명이나 되는 한국이 정상적인 경기를 펼친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신감 불어넣기'에만 급급하는 감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비판 받은 바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네덜란드전 패배 이후에도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보도했다는 평가다. 6월 22일자 '차감독 인터뷰'기사에서 조선은 <"책임통감 ... 벨기에전 승리 빌겠다">, <"월드컵1승" 한국축구 새 역사 이루길>이라고 제목을 달아 다른 신문들

이 차감독 비난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차감독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실어주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 6월 22일자 칼럼 <반성 없이는 또 몰락한다>에서는 "바른 체육정책도 투자도 없이 대표선수 몇 사람이 천지개벽을 이루기를 기대해온 정권이나 언론이 오늘 반성할 점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겨레 23일자 국민기자석에서도 <결과에만 집착 쓸쓸> <한국 총체적 부실 반영>등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16강 마케팅' 보도...사행심만 부추겨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8%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벌이며 소비성향을 충동질하는 기업들에 대해 어느 신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단지 스포츠 마케팅의 가능성 운운하며 월드컵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추상적인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은 월드컵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축구의 16강 진출이라는 '보험사고'로 약 440억원의 보험금을 타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소비자들의 도박심리를 유도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경제회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월드컵에 대한 언론의 과열 보도 아래 '제2기 노사정 위원회', '남북경협'문제 등 중요한 정치·사회적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묻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피노체트 체포 보도>

조선일보 유독 피노체트 편들기...개발독재에 대한 향수 드러내

98년11월26일~30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대한매일
신문모니터분과

지난 11월25일 영구최고법원은 10월16일 긴급체포된 피노체트에 대해 '면책특권 불인정-체포적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3국에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내리고 체포한 것은 칠레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과정과 집권기간동안 수많은 칠레민중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일삼은 반인륜적인 죄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를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각 신문들은 피노체트의 긴급체포부터 영국 최고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관심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자사 기자에 의한 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외통신사에 의존하고 문제제기를 부각하여 판결의 의미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한편 앞서 일부시각으로 소개했던 '주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언급조차 안된 신문이 많았으며 주권침해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발독재자 옹호하는 조선일보

피노체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낸 신문은 조선일보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은 칠레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부분을 강조, 기사화하였다. 11월26일자 9면에서 "영국의 결정은 칠레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자존을 정면으로 건드린 결과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우익독재를 휘둘렀던 피노체트는 과거 3000여명의 희생자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좌파가 있다고 해도 다른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기술한 뒤 이어진 내용이어서, 피노체트의 개발독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맥락에서 '주권침해'를 거론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반인륜적인 무력탄압과 죽

왜로 수많은 희생을 야기시킨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대한 단죄보다도 그의 개발독재를 옹호하며 그의 미를 축소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외신인용을 통해 '국제인권운동사의 이정표'가 될만한 사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주권침해 등 여러 시각에 대한 기사 부재, 사실등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등 소극적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심도깊은 분석기사도 부족했다.

이와달리 피노체트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신문은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이다. 두 차례 칼럼을 내보낸 대한매일신문은 11월27일자 칼럼 <피노체트와 정직한 역사>에서 "'일제치하의 친일파 인사들의 행적에 대한 규명'작업도 정직한 역사의 자기구현 맥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외신인용에 급급한 보도를 지양하고 국내 관련 사안에 적용, 과거청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보도로 평가받았다. 한겨레신문도 27일자 사실 <피노체트 스페인에 보내야>에서 "세계 곳곳에 건재한 독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교육적 효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부추기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 판결이 '주권침해'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와 달리 바람직한 대안제시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피노체트 독재정권 수립당시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책임을 언급한 신문도 대한매일과 한겨레뿐이었다. 특히 한겨레는 11월30일 <미국 '피노체트 파일' 처리 고민>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더러운 과거는 미국외교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II

6·4 지자체선거보도 감시모니터



풀뿌리정치 망각한 언론

지방자치단체 2기를 이끌어갈 풀뿌리 일꾼들을 뽑는 6.4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이후 첫 전국규모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에 민연연을 비롯한 시민연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이하 선감연)를 조직,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를 낱낱이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언론은 지방선거에 걸맞는 지역별 의제와 쟁점을 찾아내 보도하기보다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정당, 지역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만 부각시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선거보도행태를 그대로 재현했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면서 각 신문들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만한 후보검증과 정책비교 보다는 단순한 후보의 이력에만 초점을 맞춰 모도했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일부 신문의 편파보도성향이 뚜렷해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일부 지역의 혼탁선거 양상만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 협력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했다.

<‘지방자치’ 빠진 선거보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쟁점 부각 소홀...중앙정치에만 관심

98년 5월1일~9일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6·4 지방선거에 대해 각 신문이 철저히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만 보도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종을 가져올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또한 지방정치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보도는 ‘정계개편’, ‘환란책임’ 등 정치쟁점만을 주요 기사로 취급하고 있으며, 지역구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판세분석 기사, 각 후보에 대한 객관적 검증 회피 등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자체 선거보도는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 ‘정치쟁점’ 살리고 ‘지방자치’ 죽이고

최근에 언론매체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인 ‘정계개편’과 ‘환란 책임 수사’, ‘임창렬 후보의 책임논쟁’들이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중앙일간지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각 당의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는 쟁점과 공방이 매일 정치면의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언론은 지방자치제도를 주요 의제로 삼고서 현재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에 언론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여론수렴 활동을 벌였어야 옳다. 하지만 당시에도 언론은 다른 정치쟁점에만 매달려 그 역할을 방기했고, 지금은 거의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언론이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중앙일간지

에서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란 대단히 힘들다. 그 이유는 언론매체들이 의도적으로 기사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업적이며 선정적인 판세 분석, 인물 동향, 정쟁 기사들이 매일 정치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상업주의는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만 할 뿐이다.

가. 지방자치의 의미 살린 좋은 기사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룬 칼럼은 극히 적다. 앞으로 언론이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다.

동아일보 5/7

(동아광장) <김용정 /地自制 계속 표류하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과 제2기 지방자치제 정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6·4지방선거... 95년 당시 다분히 정치적 고려의 산물로 도입된 지자제는 기본적인 자치여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전면 실시됐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했을 뿐 사람과 돈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조직권 등 이른바 자치권이란 것도 유명무실하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과제인 지방자치구조와 행정구역 개편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뛰어넘어 곧바로 세계체제로 연결되는 국제화의 구도 속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다."

나. 잘못된 '정치쟁점' 보도 사례

임창렬 국회의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시비가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많은 지면과 기사량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몇몇 신문의 사실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본질을 비켜나 '외환위기 책임 규명'이라는 여야의 정치 공세,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임창렬 후보 홈페이지와 국회의 발목 잡기로 보여지는 기사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정계개편과 연결지어 보도하는 태도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계개편과 연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동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정적으로 접근하여 흥미만을 추구하는 보도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과 변수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가 '환란책임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시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정치 쟁점들만을 다룬 것으로써 지방선거에 알맞는 쟁점 발굴 및 의제화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역 쟁점이 신문 지면을 통하여 의제로 설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도 사례>

○ 임창렬 후보 책임 공방 보도

조선일보

5/1 (4면) 임창렬씨 주장 사실 아니었다
 (4면) 경기지사 선거 쟁점 떠올라

"임시 사실은폐" 후보사퇴 촉구 野

"취임당시엔 IMF 신청 몰라" 林

5/6 (4면) YS, 林씨 취임회견 듣고 깜짝놀라
 - 외환위기 책임론 확대일로

동아일보

5/2 (5면) '임창렬씨 환란책임' 공방

한나라 "당시 구제금융 발표미뤄 한국 신인도에 치명타"

임창렬씨 "지방선거 겨냥한 음해"

○ 정계개편과 연관지은 선정적인 보도

경향신문

5/1 (3면) 여도 야도 '불타는 5월' / 지방선거 승패가름...사활전 힘겨루기

여 "정계개편 통해 국정위기 정면돌파"

야 "과반의석 무너지면 당도 무너진다"

○ 쟁점 및 변수 보도

동아일보

5/6 (5면) 지방선거 D-29

4대 변수 TV토론회 "안방 잡아야 당선" 팀구성 분주

2여의 공조 '광역'만 단일후보... 위력 미지수

야대붕괴 여부 여야 선거운동에 영향력 클 듯

국민신당 역할 곳곳서 인물난... 대약진 걸림돌

4대 쟁점 외환위기 책임 "구정부 실정" "경제정책 걸돌아"

실업 대책 야 "근본적 대책 부실" 공세 별러

편중인사 논란 "지역배려 신경" "호남출신 우대"

정계개편 "자발적인 탈당" "야당파괴 한심"

한겨레

5/4 (5면) 지방선거 3대 쟁점

편중인사 - 야 '호남고립' 집요한 총공세

실업대책 - '3무'-'과거정권 책임론' 맞서

정계개편 - "야당파괴"대 "정국안정" 공방

☞ 정계개편 논의에 있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국안정'이라는 여론의 명분에 대해 더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관적인 견해 제시

○ 중앙정치 연장 대결 부각 선정 보도

한국일보

5/1 (4면) 틈새없는 정국 '대결의 5월' / 사활 걸린 6·4선거 / 大격류 닥쳐올 듯.

5/6 (4면) 여야 공격선봉 '입'들 바빠졌다

☞ 폭로전, 맹폭격, 기습 선제공격, 홈페이지,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전 쟁터 묘사

한겨레신문

5/4 (5면) 수도권, 영남서 사활전 진검 승부/ 여야 "물러설 곳이 없다"

중앙일보

5/5 (4면) 6·4지방선거 앞으로 30일

국민의 정부 중간평가 / 여야, 당운전 대장정

☞ 각당의 선거전략 내용 소개, 비판이나 평가는 없음.

경향신문

5/5 (4면) '위하興' 비장한 결의 '이겨野'

DJ개혁 성공위해선 압승은 필수불가결"국민신입

재확인 다짐 (국민회의 전진대회)

"정권탈환 전초기지 이번 선거통해 확보"

현정권 중간심판 벌러(한나라필승대회)

☞ 각 당의 대회를 지나치게 크게 보도함.

2. 후보 검증 없이 탐구 수준에 그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부호들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바람직한 지도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별 출마 후보에 대한 보도는 '후보검증'이 아니라 '후보탐구'의 수준에 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은 자질, 능력, 경력, 청렴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지역별 쟁점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 정책, 공약들에 대한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신문의 후보 보도는 흥미 위주의 내용, 가십성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정작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은 빠져 있다.

<보도 사례>

경향신문

5/4 (5면) <경륜 대 경륜 '화려한 총돌' 고건, 최병렬> (후보탐구-서울)

☞ '장점', '단점', '후보 주요 명세서' '각 캠프 사람들' '주요 공직생활 시절 행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함.

5/5 (5면) <한때는 동료, 오늘은 적으로> (후보 탐구-경기)

☞ 경기지사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의 현안에 대한 의제설정은 찾아볼 수 없음.

5/6 (5면) <관료출신끼리 '진검승부'>(부산시장 후보탐구)

☞ 앞의 후보탐구 기사와 비슷한 양상

한겨레신문

5/5 (4면) 후보검증 서울

<청렴한 '행정달인' 12대때 민정당의원 - 고건 국민회의 후보>

<실무능력 '자타공인' 보수.강성,참모 역할 - 최병렬 한나라당 후보>

☞ 후보 경력,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양당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게 문제임. 개관적인 검증이 될만한 분석이나 정보는 없음.

5/6 (4면) 후보검증 경기

<능력있는 소신과 관료 / 기아 혼선때 주무광관 - 임창렬>

<화려한 경력- 큰 친화력 / 욕 안들으려 현안 미뤄 - 손학규>

☞ 지역 쟁점과 결부한 접근이 없음

3. 지역구도 극복 노력 없는 판세분석

지역별 판세분석 보도는 철저히 지역구도에 입각해 있다. 신문마다 접근하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지역구도에 입각해서 지방선거가 치뤄지는 것은 지방정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에 대한 개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언론은 '지역구도'가 아닌 지역별 쟁점과 인물 중심의 보도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내용들은 과거의 선거제도, 지역구도에 입각한 판세분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감시연대회의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판세분석이 민주주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

만 낳고 있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그러나 언론은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언론은 결국 지역구도 극복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지역구도를 이용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신문별로 구체적인 보도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5/3 (4면) <여야 '지역분점 여전 상대덧발 인물난 극심'> (6.4 지방선거 판세점검)

5/5 (4면) <국민회의-자민련 "영남의 모든곳서 우세"> <한나라당 "수도권 강원 충북 승산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 분석)

☞ 각 당의 주장을 인용하여 지역구도를 분석하고 있음. 언론은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수, 틀을 갖고서 지역 판세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임. 하지만 유력 중앙일간지에서조차 이러한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경향신문

5/6 <수도권은 '우리가 이긴다' / 여야 초반판세 분석>

<연합공천 위력 11곳 압승자신 / 국민회의·자민련>

<영남권 싸움이 중부권도 기대 / 한나라당>
☞ '압승', '영남권 싸움이'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일보

5/4 (4면) <여서야동 발판 "중원을 잡아라">

☞ 지역주의 타파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를 주도해 나가는 기사다.

한겨레신문

5/6 (5면) 판세 점검

<'여서 야동' 서울,경기 '환란변수'>

<"수도권 영입트리오 이변없는 한 난승"/호남 충청 싸움이.. 강원 교통정리 관심>(국민회의-자민련)

<YS총리, 부총리 상대 서울-경기 박빙/영남 석권 김기재 경계... 호남 포기상태>(한나라)

4. 좋은 보도 사례-중앙일보

신문모니터팀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 기존의 잘못된 정치풍토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 시민-사회-노동 단체의 참여를 긍정적,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보도 등을 좋은 보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중에 좋은 보도로 꼽힌 사례를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5/1 (4면) <노조 선거운동 허용 /개정 선거법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선거구별 인구편차 극심/의원 무조건 1구 1명/강원도에선 170배나 차이나는 곳도>

5/4 (사설) <후보 공천을 정당당당하게>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

중앙정치의 연장보도 일관...후보 검증에 초점 맞춰야

98년 5월 9일 ~12일

문화,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신문모니터분과

제2기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2기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6·4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와 분리되어 각 지역별 의제와 쟁점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도 각 후보의 정책과 지역현안 과제, 올바른 후보검증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간지의 선거보도를 살펴보면 정책 대결, 후보검증보다는 중앙 정치의 연장선, 여와야의 갈등, 대립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처럼 중앙일간지들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결과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분리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현실이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며, 각 정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이후의 정계개편과 연관지어 '생과 사의 전쟁'으로 여기며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너무 중앙정치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동시에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각 언론매체들은 지방의 입장, 지역 주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6·4 지방선거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정책 부재 비판...지방자치 의미 살려야

동아일보 5월 9일자는 서울, 경기지역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3면에 걸쳐 보도하고 있다. 각 면의 머릿기사 제목을 보면 <서울 고건 47.9% 최병렬 18.7%, 경기 임창렬 34.4% 손학규 21.5%>(1면), <서울 '여 초강세' 경기 '안개속'>(3면), <작년 한나

라당- 국민신당표 상당수가 부동화>(4면)등 전부 지지율 순위만을 갖고서 표제를 달았다. 기사도 각 당의 판세분석 내용만 소개하고 있을 뿐 정책에 관한 보도는 전혀 없다. 4면에서는 각 당의 97년 이후 지지율 변화를 도표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는 지방자치의 자율성보다는 중앙당에 예측되어 지배를 받는 정치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론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접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아일보 11일자 6면 <서울 초반판세 여안도 야 당혹>을 보면 "임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환란 책임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치중키로 했다.", "한나라당은...그 동안의 환란책임론 공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손후보 진영은 환란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임 후부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소재를 하나만 더 찾아내면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전을 여과 없이 증계 보도하는 것으로서 정치협오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인물 대결에만 중점을 두는 '게임식 보도'의 전형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한겨레신문 11일자 <지방선거 20여일 앞둔 민심 여론조사>의 <고건 당선 가능성 최병렬의 4배>라는 기사를 보면 "정국안정 위해 여당 연합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정당지지도 국민의회의 41.7%, 한나라당 12.8%"라고 기사화했다. 또한 '민감지역 경기도 판세'에서는 <임·손 20%차, 한달 새 8%로 줄어>라는 제목하에 "정국안정 위해 여당 후보당선 돼야한다 50.5%...한나라당 주장 공감 13%"라고 기사화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모두 중앙정당의 지지율과 지자체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을 관련시키고 있어 지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이므로 이와 같은 분석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후보의 공약이나 쟁점을 좀 더 부

각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보도를 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한겨레는 12일자 4면에서 부산, 대구지방 여론조사 내용을 싣고 있다. <대구 한나라당 강세 여전, 부산 부동층이 거의 절반, 강원 여지지 급격히 늘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대구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지지 뚜렷... 부산 낮은 투표율... 부동층 多...강원도·신여권지지 늘어..."라고 기사화 하였다. 이처럼 지역감정만을 변수로 지지율을 분석할 뿐 정책대결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 받았다.

이외에도 각 신문들이 여당과 야당의 환란책임 공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환란책임 공방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신문들은 그 배경과 진위 여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방 자체에만 집중함으로써 본질을 벗어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또한 공방 자체가 선거의 주요 의제, 쟁점으로 부각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와 언론의 잘못된 의제설정과 그 영향으로 지방선거가 결국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 '후보검증'에 더 초점 맞춰야

선거보도는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 문제해결 능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 후보검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신문은 아직까지 없다.

한겨레신문은 각 지역별로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다. 각 후보의 신상명세, 과거 경력, 능력 등에 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어서 다른 신문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보검증에 있어 물론 각 후보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준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공약검증이 없는 것

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기사>

5/9 <확정 광역 단체장 본격 검증- 부산지역>
<학계에서 민주화운동 30년.... "승산 낮다" 여론, 하일민 국민회의 후보>

<행정력·추진력 견비....."무분별 개발" 평가도, 안상영 한나라당 후보>

<일육심 큰 행정관료.... 경선 거부 탈당 부담, 김기재 무소속 후보>

5/12 <확정 광역 단체장 후보 본격 검증- 인천 지역>

<미디어 벨리등 비약 토대 추진, 환경파괴·자금난 "능력 한계" 비판도, 최기선 자민련 후보>

<윌스트리트에서 금융선물 중개, 정치 신인으로 검증기회 없어,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

<남동구청장직 "무난했다" 중평, 최시장 영입하자 국민회의 탈당, 김용모 국민신당 후보>

5/12 <확정 광역 단체장 후보 본격 검증- 제주 지역>

<전문 행정관료 일처리 원단 "해바라기 성향" 비판도, 우근민 국민회의 후보>

<금융계 35년 "제주토종" 자부. 인지도 낮고 행정경험 없어, 현임종 한나라당 후보>

한편 한국일보도 지역별 출마예상자를 소개하고 있지만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각 지역의 판세분석에만 그치고 있어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정책선거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조선일보가 11일자 5면 <한나라당 공개질의, 고건-임창렬 후보에 보내>라는 박스기사를 통해 고건, 임창렬 후보에 대한 야당의 질의서를 기사화한 것은 상업성을 노린 선정적인 보도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각 신문마다 후보 검증 기사가 실릴 것이지만,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측면

에서 올바른 평가와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검증 보도를 기대한다.

3. 혼탁·과열 선거 주체 분명히 밝혀라

6·4 지자체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서는 타락, 혼탁선거 현상을 보도할 때는 그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비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현상을 다른 기사들은 그 기준을 무시하고, 타락의 주체를 밝히지 않아 자칫 선거분위기 전체를 부정적인 경향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선거관련 기사량이 매우 적은 중앙일보는 11일자 사실 <IMF시대에도 돈선거인가>에서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돈타령부터 시작하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든 돈선거의 관행이 우리 정치의 밑바닥에 아직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사례를 분명히 제시하는 기사 없이 사실로만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시비를 가려야 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역시 9일자 1면에서 <지방선거 혼탁, '2조 돈 바람', <사상 최대규모, 소비성 자금화.... 위기경제 악화 부채질>라는 제목을 달고 "6·4지방선거가 20여일.... 선거비용이 국제통화기금체제의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총비용이 범정한도액인 5천2백75원을 3~4배 넘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모두 소비성 자금화에 낭비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번 선거가 돈 선거, 혼탁 선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 역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이 추측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의 11일자 상자기사는 중앙, 문화일보와 달리 몇몇 지역을 예로 제시하는 등

근거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썩은 풀뿌리서 뭐가 날까> <지방선거 후보 경선부터 혼탁·과열> <"돈뿌려...담합해서..." 탈락자들 불복·탈당 정당 옮기고 무소속 출마 분신자살 기도까지">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달기로 비판받았다.

4. 잘된 기사들-조선·한겨레

제1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게재하고 있는 신문들이 있어서 좋은 보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심층적인 접근이 없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으며, 지방면 및 사회면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선일보 4월 1일부터 <민선자치 1기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자치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부분적인 현상들에 대한 접근이지만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겨레신문도 5월 11일부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선거보도는 정책대결과 후보검증을 외면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중앙정치 대결 구도의 연장선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지역구도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보도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선거보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만 낳을 뿐이다.

앞으로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후보검증, 지역현안과 공약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보도해줄 것을 당부한다.